
1. 국내 금융산업의 과거, 현재, 미래

I. 과거 국내금융산업의 역할 평가

II. 금융구조조정과 금융산업의 현주소

III. 금융산업의 미래

I. 과거 국내금융산업의 역할 평가

1. 개발경제시대의 금융산업 : 1960-70년대

가.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1) 1960년대의 개발정책 지원

우리나라는 1960년대에 들어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안정을 점차 회복하는 한편 경제적인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주도하에 적극적인 경제개발전략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경제개발 초기단계에서 겪은 가장 큰 애로요인중의 하나는 국내에 축적된 자본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개발 추진과정에서 부족한 자본을 동원하고 이를 전략산업에 집중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금융산업에 크게 의존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즉, 정부는 금융산업을 그 자체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하나의 독립된 산업이 아니라 실물경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게 된 것이다.

당시 정부는 수출산업, 수입대체산업, 동태적 비교우위(dynamic comparative advantage) 산업 등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등의 일반적인 경제정책은 물론 정책금융, 선별금융, 지시행정 등의 직접적인 수단도 사용하였다. 특히 정부는 개발전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각종 금융제도 및 규제장치를 정비하고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을 통제하였으며,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자금의 가용성(availability), 금리 및 기간 등에서 직접적인 형태의 금융우대를 제공하였다.

당시 단기금융시장 및 자본시장이 발달하지 못하였던 상황에서 정부는 특히 은행산업을 경제개발 전략 추구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1961년에 「금융기관에 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되면서 은행의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이 제약되었으며, 「부정축재처리법」의 제정을 통해 당시 재벌이 보유하고 있던 시중은행 주식의 대부분을 정부에 귀속시키고 시중은행을 공기업화하였다. 그리고 1962년에는 「은행법」을 개편하여 은행의 인사, 내부경영

및 자산운용에 대한 정부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한편 「한국은행법」의 개정을 통해 금통위를 개편하고 중앙은행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을 증대시켰다.

은행만으로 정책목표를 충분히 달성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응하기 위해 특정 목적을 가진 금융기관들이 신설 또는 확충되었다. 1961년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은행을, 1962년에는 서민금융의 지원을 위해 기존의 무진회사를 통합하여 국민은행을 설립하였다. 또한 산업은행과 농업협동조합을 개편하고, 1962년 수산업협동조합, 1967년 한국외환은행, 1969년 한국주택은행 등 특정부문에 대한 금융지원을 담당하는 특수금융기관들이 설립되었다. 그리고 1967년에서 1971년까지의 기간중에는 지역금융의 활성화를 위해 10개의 지방은행¹⁾이 신설되었다.²⁾ 특히 정부는 국내에서의 자본 및 외환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외국차관지급보증법」(1962) 및 「외자도입법」(1966) 등을 제정하였으며, 1967년에는 미국의 चे이스맨하탄 은행을 시초로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설치를 허용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환율제도를 개편하고 수출업체에 대한 은행의 자동대출승인제도(1961) 등 은행 및 한국은행의 재원에 기초한 각종 수출금융제도를 마련하고 무역금융의 금리를 대폭 인하하는 등 무역금융 지원체제를 정비하였다. 그리고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저금리 정책을 사용하였고, 물가상승을 방지하고 국내저축의 동원을 위해 대폭적인 금리인상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³⁾

2) 1970년대의 금융억압과 금융다변화

정부주도의 경제개발정책은 1970년대에도 지속되면서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금융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였다. 특히 대규모 자본을 필요로 하는 중화학공업 등 대형장치산업을 육성하거나 산업합리화 작업 등 당면한

1) 1959년 지방은행으로 설립된 서울은행은 1962년 시중은행으로 전환되었다.

2) 그밖에도 「보험업법」(1962) 및 「증권거래법」(1962)의 제정 등으로 비은행 금융산업의 기반도 확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보험의 경우는 국민의 인식부족과 낮은 소득수준 등으로 크게 활성화되지는 못하였으며, 증권시장의 경우도 그 기반이 취약하여 증권파동으로 큰 혼란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3) 1965년의 금리현실화 조치로 인해 은행의 수신금리가 오히려 여신금리를 상회하는 역마진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로 인한 은행의 수지악화는 중앙은행자금으로 보전하기도 하였다.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금융개입과 금융억압(financial repression)이 심화되기도 하였다. 동기간 중 정부는 금융기관의 여신배분을 통제하고 정책금융 지원체제를 재정비하였다. 특히 중화학공업을 육성하기 위해 1974년에는 국민투자기금을 설치하였으며, 1976년에는 수출입은행을 설립하여 중화학공업의 수출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선별자금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별로 우대적격업체 혹은 우선지원부문을 선정하거나 사치성 서비스업 등에 대해 대출억제 혹은 금지부문을 설정하여 자금의 공급규모 및 조건 등을 차별화하였다. 또한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달러당 용자단가를 수차에 걸쳐 인상하거나 재할인을 확대하는 등 수출금융 지원제도를 강화하였다. 지방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을 우대하고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을 도입하였다. 이와 함께 1976년에는 주거대출은행제도를 통해 대기업에 대한 여신관리를 은행이 직접 담당하도록 하였다.

한편 정부는 경제여건이 악화되는 경우에 각종 긴급조치 등의 비상수단을 동원하여 금융산업을 통제하기도 하였다.⁴⁾ 특히 1972년에는 당시 악화된 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서 「8·3 긴급경제조치」를 실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당시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었던 고리의 사채⁵⁾를 동결하는 것이었는데, 이와 더불어 신용보증제도를 확충하고 산업합리화자금을 조성하였으며 대폭적인 금리인하 및 환율안정화 조치를 시행하였다.

「8·3 조치」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에는 다양한 형태의 비은행 금융기관이 설립되고 금융산업의 구조가 은행 위주에서 탈피하여 다원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때 신설된 금융기관으로는 사채자금을 양성화하여 기업의 단기자금을 확충하기 위한 투자금융회사(단자사), 주식 및 채권 등 증권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투자신탁회사, 외자도입 등 다양한 금융업무 취급이 허용된 겸업형태의 종합금융회사, 기업에 대한 장기간의 시설 대여를 위해 설립된 리스회사, 서민에 대한 사채시장을 제도금융권으로 흡수하기 위한 상호신용금고, 도시영

4) 예를 들어 1974년 1월 14일에는 석유파동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물가안정을 기하기 위해 '대통령 긴급조치'를 취하였으며, 곧 이어 「5.29 조치」를 발동하여 기업공개 및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촉진하고 대기업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제도를 마련하여 대기업의 과도한 은행차입 의존도를 낮추려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5) 당시 신고된 사채규모는 3,456억원으로 총통화(M2)의 28%, GNP의 8.2%에 달하였다.

세민과 농어민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신용조직을 정비하기 위해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수협 상호금융 등을 들 수 있다.

<표 I -1> 1970년대 금융기관 설립 현황

금 융 기 관	설립연도	근 거 법 규
신용협동조합	1972년	신용협동조합법 (1972.8)
새마을금고	1972년	신용협동조합법 (1972.8)
농수협상호금융	1972년	신용협동조합법 (1972.8)
투자금융회사	1973년	단기금융업법 (1972.8)
상호신용금고	1973년	상호신용금고법 (1972.8)
국민투자기금	1974년	국민투자기금법 (1973.12)
리스회사	1974년	시설대여산업육성법 (1973.12)
투자신탁회사	1974년	증권투자신탁업법 (1969.8)
신용보증기금	1976년	신용보증기금법 (1974.12)
종합금융회사	1976년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1975.12)
한국수출입은행	1976년	한국수출입은행법 (1969.7)

나. 금융기능과 금융규제

1) 금융규제의 필요성과 문제점

일반적으로 금융의 핵심적인 역할은 불특정다수로부터 유입된 자금을 기업 등 자금부족부문에 전달해주는 중개기능이다. 그러나 금융이 중개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수집·분석 및 사후조치의 적정성과 적시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단순히 자금잉여부문으로부터 유입된 자금을 자금부족부문에 연결시켜 주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이 과정에서 누구에게, 어느 정도 자금을 공급하고, 언제 회수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를 압축하면 금융의 ‘정보생산 및 위임된 감시기능’으로서, 금융기관이 전문성과 정보력이 부족한 일반인을 대신하여 차입자의 제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함으로써 대상기업을 판별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취하는 일이다.

이와 같은 기능이 원활해지면 금융은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성장을 더욱 촉진하고, 반대로 부실기업이나 장래성이 낮은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공급을 중단하여 퇴출을 유도하는 시장기능에 의한 자금배분 및 구조조정을 촉진시킬 수 있다. 만일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잘못 판단하여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에게 자금을 지원한다면, 경제내의 희소한 자금을 낭비하게 되고 결국 경제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금융이란 단순히 자금의 통로로서 경제 내 '혈액'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기반으로 정보를 분석하고 관리함으로써 경제내의 자금배분을 결정하는 '두뇌'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산업의 발전은 국민경제의 장기적인 성장능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⁶⁾

그런데 정보생산 및 위임된 감시기능을 담당하는 금융산업은 본질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성, 불완전경쟁, 외부효과 등의 특성으로 인해 시장실패(market failure)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기관은 정보면에서 볼 때 차입자에 비해 불리한 반면 예금자에 대해서는 우월한 비대칭적 특성을 갖고 있다. 또한 금융산업은 전산설비 등 대규모 투자가 소요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존재할 수 있고, 금융기관의 대출상품은 본질적으로 이질적 생산물(heterogeneous products)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완전경쟁이 유발되기 쉽다. 그리고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산업은 일부 금융기관의 부실이 전체 금융산업으로 파급되는 대규모 예금인출사태(bank-run)가 발생하기 쉬우며, 이로 인해 금융시장은 물론 실물경제에까지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금융시장의 불완전한 기능을 보완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 및 규제가 필요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금융산업에 대해서는 여타 산업에 비해 정부의 규제 및 개입이 많은 것이 일반적인 특징이다. 특히 경제구조가 성숙되지 못하고 금융시장이 미발달한 경제개발의 초기단계에 있어서 정부의 금융시장 개입은 국민경제의 성장은 물론 금융의 발전 측면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

그러나 금융규제는 경쟁을 통한 시장기구의 효율성을 제약하고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금융규제가 장기간

6) Roubini and Sala-i-Martin(1995)은 많은 개도국의 경제성장률이 낮은 주요 원인으로 금융의 미발달을 지목하고 있다.

에 걸쳐 시행되거나 경제구조가 다원화되면서 정부가 민간에 비해 정보면에서 열세에 놓이게 되면 부작용과 비효율성이 심화될 수 있다. 또한 시장원리에 반하는 규제를 시행하는 경우 이를 회피하려는 시장 경제주체들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규제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도 있다.

2) 실물경제지원을 위한 금융규제의 문제점

경제개발 초기단계에서 우리나라의 금융규제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먼저, 금융규제는 경쟁을 통한 금융의 효율성 제고보다도 국민경제발전, 특히 수출산업과 제조업을 지원한다는 공공성을 강조하였다. 이 과정에서 개인 등 예금자보다는 기업 등 자금수요자가 중시되었고, 금융시장보다는 실물경제의 발전이 우선시 되었다. 또한 금융규제가 일관성과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추구되기보다도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괄적이고 단기적인 정책목표하에서 시행되었다. 그리고 금융규제의 투명성 부족이 또 다른 문제로 부각되었는데, 명시적인 법적 근거 없이 정부의 지시나 창구지도 등에 의한 비명시적인 금융규제가 정부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시행되기도 하였다.

사실 경제개발 초기에 정부의 직접적인 금융시장 개입 및 규제는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금융기관의 안전성을 제고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과도한 금융규제는 오히려 실물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에 걸림돌이 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물론 정부의 암묵적인 보호막 안에서 국내금융기관들은 안전성을 유지하였고, 이것이 국내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국내금융기관들의 신용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금융의 효율성보다도 공공성과 안정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금융규제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면서 자금배분의 비효율성과 경제의 불균형발전 등이 초래되어 결국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정부의 과도한 금융개입은 금융기관 내에서 안이하고 소극적인 의사결정방식을 고착시키고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의식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그리고 진입과 퇴출, 업무영역, 소유구조 등에 대한 규제 등으로 인해 금융기관간 건전한 경쟁풍토가 조성되지 못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이것이 금융산업의 효율성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금리규제를 포함한 각종 금융

규제 하에서 금융기관들은 수익성이나 내실보다도 외형위주의 성장을 일차적인 경영목표로 추구하는 관행이 조장되었다. 이러한 과도한 금융개입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책임경영 풍토가 정착되지 못하고 위험관리능력이 약화되었으며, 부실채권이 누적되거나 금융기관이 부실화되는 경우 책임소재의 문제가 초래되기도 하였다. 또한 시장원리에 위배되는 각종 금융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꺾기, 커미션 등의 불건전 금융관행을 유발시키고 불법거래와 사금융의 번성 등 각종 부작용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1960-70년대를 통해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실물경제 지원을 위해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급속한 경제발전을 달성하는 데 커다란 공헌을 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경제개발 초기에 정부주도의 개발정책과 금융산업의 실물경제 지원은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다. 또한 실물경제의 성장과 함께 금융산업도 크게 성장하였기 때문에 금융자산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구조도 다원화되고 단기금융시장 및 자본시장이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금융의 실물경제지원이라는 정책수단적인 기능이 너무 오랜 기간동안 강조되어옴에 따라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여신심사 및 자원배분 기능이 왜곡된 측면도 있다. 또한 정부주도에 의한 금융의 선별지원정책은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경제구조가 다원화하면서 지원대상 선정에서의 비형평성, 지원체계 및 방식에서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실효성이 약화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특정부문에 대한 저금리 금융지원은 인위적인 부의 이전 및 경제력 집중, 산업간 불균형 현상을 초래하였으며, 기업의 금융기관 차입의존도를 높여서 기업은 물론 경제전반의 안정성까지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다.

한편, 경제개발과정에서 금융산업은 정부와 기업간의 연결고리 형성을 위한 수단으로도 이용되었다. 사실 정부가 직접적으로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경제개발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경유착의 고리가 형성되고 지대이윤추구 행위(rent-seeking behavior)가 빈발하였다. 그리고 정부주도 개발정책의 실패로 부실기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제하기 위해 산업합리화 등의 명목으로 인위적인 금융지원이 제공되는 통로가 되기도 하였다. 결국 금융정책이 특정산업 혹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 결과 여타 금융서비스 이용자의 편의증진이나 후생증대 등이 간과되고 저축자의 희생이 강요된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2. 금융자유화 및 개방화 시대의 금융산업 : 1980-90년대

가. 금융자유화 및 개방화의 추진

1) 1980년대의 단편적인 금융규제완화

1980년대에 들어 우리나라는 금융자유화 및 개방화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과거 금융억압에 따른 자원배분의 왜곡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자유화에 대한 필요성이 국내에서 크게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범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금융자유화 및 개방화 압력을 받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미국 등 자국 금융산업의 우월성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을 확대하려는 국가들의 금융개방 요구가 표면화되었다.

이에 정부는 과거 정부주도의 개발정책에서 탈피하여 시장기능을 중시하는 금융자유화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이때 금융자유화의 충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빅뱅식의 전격적인 전략보다는 점진적이고 완만한 속도의 자유화 추진전략이 채택되었다.

먼저 정부는 상징적으로 은행의 자유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은행법」을 개정하여 시중은행의 민영화를 추진하였다. 또한 정부는 인위적인 시장개입을 축소하기 위해 정책금융에 대한 금리우대를 축소·폐지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각종 규정 및 통제를 정비하였다. 금융기관의 신규진입도 허용하는 한편 부분적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하여 시장경쟁을 촉진시켰다. 그리고 국내 금융기관의 대형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증자 및 점포확대 등의 자유화 정책도 시행하였다. 금융시장에서는 규제금리의 실세화를 추진하고 금리체계의 합리화를 꾀하는 한편 CP, CD, RP, CMA 등 금리가 자유화된 신종 금융상품을 도입하였다. 또한 국내금융시장의 개방을 추진하여 외국인과의 합작은행 설립, 보험시장의 개방 확대, 외국인의 국내증권 간접투자 등을 허용하였으며, 외환 및 자본거래에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의 금융자유화 및 개방화의 진행과정은 그 속도가 상당히

느리고 단편적이었으며, 이미 시행된 자유화조치가 다시 후퇴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사실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행된 단편적인 규제완화는 기존의 다른 규제와 상충되거나 경제여건의 미성숙 등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하였기 때문에 재규제 혹은 정부의 비명시적 개입을 초래하였다.⁷⁾ 또한 자본시장의 개방도 국내외 금리격차, 자본유출입의 불안정성, 외환시장의 미발달 등을 이유로 일정이 지연된 결과 외국과의 통상 마찰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이렇게 금융자율화 및 개방화가 느리게 진행된 것은 당시 금융여건이 성숙되지 못한 탓도 있겠으나,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누적 등 과거 정부주도 개발정책의 유산이 일시에 청산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2) 1990년대의 종합적인 금융자율화 및 개방화 추진

1990년대에 들어와서 정부는 종합적이고도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금융자율화 및 개방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배경에는 과거 단편적인 금융자율화 정책이 부작용을 노출함에 따라 금융시장의 선진화와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자율화정책의 필요성이 인식되었기 때문이다.⁸⁾

먼저 정부는 1991년 민간연구소에 의뢰하여 금리자유화 4단계계획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금리자유화를 실행하여 1996년까지 대부분의 금리자유화 계획을 실천하였다. 그리고 1993년부터는 “제3단계 금융자율화 및 시장개방계획”(Blueprint)을 작성하여 대내외에 금융개방 일정을 공표하고 자유화계획을 추진하였다.⁹⁾ 아울러 정부는 금융자율화의 정착을 위해 은행장 인사 및 내부경

7) 예를 들면, 정부는 경제개발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기업의 금융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의 소유구조를 규제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인사권에도 다시 개입하였다. 또한 통화신용정책에 있어서도 정책금융 부담, 금융하부구조 미비, 경제안정화를 위한 총통화(M2)관리 등의 이유로 인해 시장기능을 중시하는 간접통화관리방식으로 쉽게 전환하지 못하였다. 한편 1988년에는 대출금리 등에 대한 과감한 금리자유화를 시도하였으나 곧 이어 금리상승 부작용 등으로 이미 자유화된 금리를 창구지도의 형식으로 다시 규제하는 등 자율화정책이 실질적으로 후퇴하기도 하였다.

8) 선진국들도 80년대에서와 같은 자율화정책의 후퇴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대해 장기계획의 수립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9) 김영삼 정부는 집권 후 「신경제」 금융개혁 방안을 작성하여 민간의 자율과 시장의 경쟁을

영의 자율화를 도모하고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정책금융 및 여신관리제도를 축소·정비하였다. 또한 신규진입, 업무영역, 소유구조에 대한 규제를 개편하고 금융하부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¹⁰⁾ 한편 통화신용정책에 있어서도 시장기능이 점차 중시되면서 경쟁입찰제도가 도입·확대되었고, 간접관리방식의 정착을 위한 노력도 추진되었다. 또한 지나친 해외자본의 유출입, 국내자본의 해외도피에 대한 우려로 인해 과거에 추진하기 어려웠던 외환 및 자본시장의 개방도 우리나라의 OECD 가입을 계기로 전향적으로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환율제도, 외환포지션 관리, 실수요증빙제도 등의 외환거래 규제가 완화되었으며 자본거래에 있어서도 해외직접투자 및 증권투자, 상업차관 및 연지급수입 등 기업의 외자조달,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 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 것이 시작되었다.

한편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통한 신용사회 정착과 경제정의 실현을 위해 1993년 8월에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였으며 1996년부터 금융종합과세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무기명채권이 도입되면서 금융실명제는 일부 예외가 허용하기도 하였으며, 금융종합과세제도는 1997년까지 시행되다가 외환위기발생과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해 유보되었다가 2001년에 다시 부활되어 현재 시행중이다. 이와 같은 변화과정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제와 금융종합과세의 도입은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용질서를 확립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1990년대의 금융자율화 및 개방화는 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단계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자율화를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여건 및 시장하부구조 구축 미비로 인해 실제로는 정부의 비명시적인 개입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금리자유화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금리상승으로 기업의 국제경쟁력과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의 금리결정 과정에 개입하였으며, 통화당국도 국공채 입찰 매매에 있어 상당기간 동안 인위적인 개입을 지속하였다. 그리고 금융 및 자본시장의 대외개방도 국내외 금리

통해 금융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포괄적인 금융제도 개편에 착수하였다.

10) 당시 금융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업무영역 및 신규진입이 확대되는 등 상당한 변화가 시도되었으나 금융기관간 이해관계 대립으로 그 효과가 크지 않았다.

차가 높은 상황에서 급속한 외환의 유출입으로 인한 국내경제의 교란을 우려하여 매우 점진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렇게 완만하게 진행되거나 또는 일부 후퇴를 반복하던 금융자유화 및 개방화의 과정은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급변하게 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국내금융산업은 국제적 기준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선진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결국 급속한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되었다.

나. 금융산업의 발전과 구조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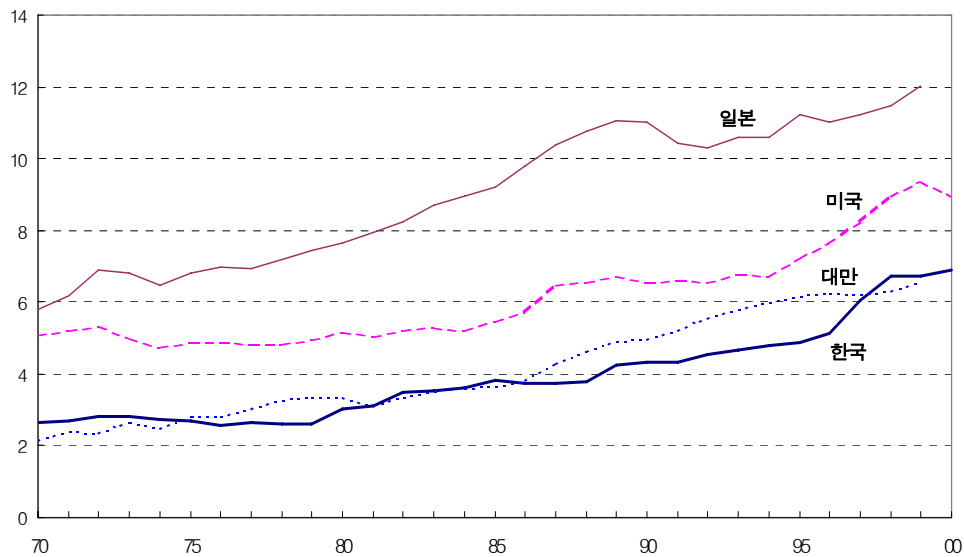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구조변화를 겪으면서 국민경제의 발전과 복지증진에 기여하였다. 경제개발 과정에서 금융산업은 국내저축의 증가와 투자자금 배분의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실물부문의 고도성장을 뒷받침하였다. 경제구조가 성숙됨에 따라 금융시장의 구조도 다원화되어 단기금융시장, 자본시장, 보험시장이 발달하였으며, 보다 전문화된 형태의 금융기관이 설립되면서 다양하고 편리한 형태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가 개발·공급되고 금융이용자의 후생이 증진되었다.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양적인 측면에서 실물경제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다. 특히 1980년대부터는 물가안정 및 소득증가에 따른 저축의 증대와 금융자산 선호도의 다양화에 힘입어 국내 금융자산의 축적이 급속히 증대되었다. 한나라의 금융자산을 실물자산으로 나누어서 금융부문의 성장정도를 측정하는 금융연관비율(financial interrelations ratio)을 살펴보면, 1970년에 2를 다소 상회하였으나 1980년 이후에 빠른 속도로 상승하면서 2000년에는 6.91 수준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는 지난 30년간 국내금융자산이 국민경제 규모에 비해 연평균 4%p 만큼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음을 의미한다.¹¹⁾ 주요국과 비교하여도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적어도 양적인 측면에서 매우 빠른 성장속도를 기록한 것이 사실이다.

11)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70년의 4.2%에서 2000년에는 17.6%로 상승하였다.

<그림 I -1>

주요국의 금융연관비율



자료 : 한국은행, 「자금순환」, 각호

FRB, 「Flow of Funds Account of the U.S.」, 각호

한편, 다양한 금융기관의 설립 및 발전은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한 민간의 자본축적을 촉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간 경쟁을 심화시켜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금융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이바지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의 전문화 및 다원화가 진전되면서 1970~2000년 기간중 전체 금융자산 가운데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비중이 크게 하락한데 반해 비은행 금융기관의 금융자산 보유비중은 크게 상승하였다.¹²⁾ 이는 1970년대 이후 다양한 형태의 비은행 금융기관이 신설·확충되었으며, 여수신 금리 및 자금운용 등에 있어 이들이 은행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의 강도가 약하였고, 금융수요의 다양화 및 고도화에 따라 은행의 전통적인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12) 그러나 1997년의 외환위기 이후에는 금융상품의 안정성이 중시되면서 비은행 예수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은행예금이 증가하고 있다.

<표 I -2>

금융기관별 금융자산의 보유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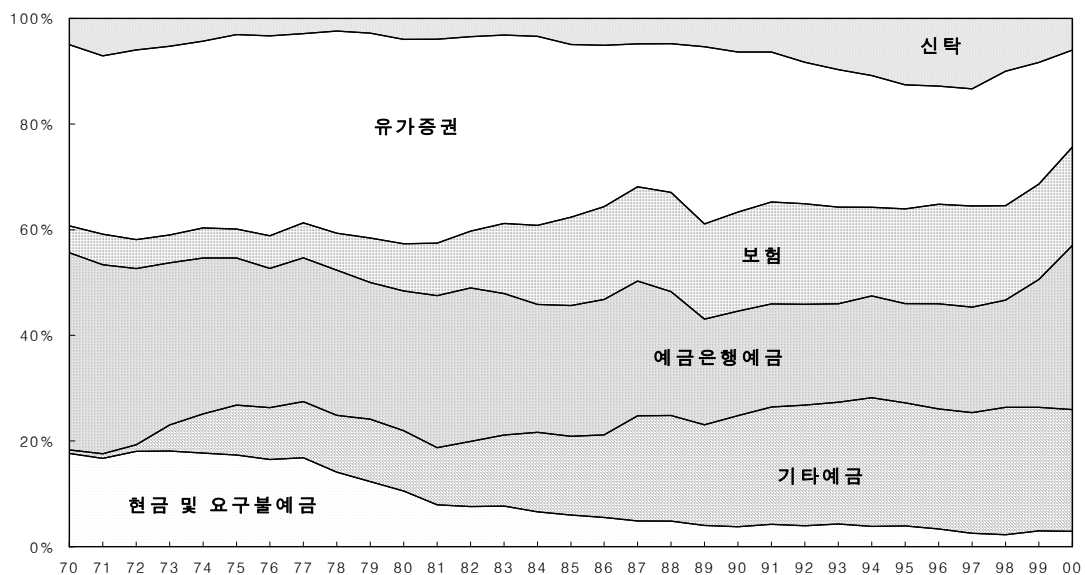
금융기관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예금은행	72.10	70.39	67.21	56.49	42.68	36.96	42.20
일반은행	35.71	42.83	43.86	35.71	30.93	28.13	33.70
특수은행	36.39	27.56	24.35	20.78	11.74	8.83	8.50
개발기관	22.85	21.42	16.55	14.57	7.97	7.11	9.40
한국산업은행	22.85	21.14	15.52	10.14	5.73	4.82	8.10
한국수출입은행	0.00	0.28	1.04	3.49	0.67	0.68	1.20
한국장기신용은행	0.00	0.00	0.00	0.94	1.58	1.61	-
투자기관	0.00	2.45	4.27	8.63	13.34	12.30	10.5
투자금융회사	0.00	1.98	2.07	3.15	4.49	2.45	0.00
종합금융회사	0.00	0.00	0.96	1.39	1.28	2.15	1.30
투자신탁회사	0.00	0.47	1.24	4.09	7.56	7.70	9.20
저축기관	3.73	4.08	7.63	13.45	22.93	33.01	26.60
상호금융	0.14	0.87	1.56	1.92	3.41	4.25	5.50
상호신용금고	0.00	0.54	0.94	2.21	2.69	3.13	1.40
신용협동조합	0.00	0.17	0.36	0.57	0.89	1.34	1.30
새마을금고	0.00	0.00	0.93	0.95	1.77	2.10	2.30
은행신탁	3.05	2.12	3.66	7.00	14.28	21.49	14.60
채신예금	0.54	0.38	0.18	0.80	0.89	0.70	1.50
보험기관	1.22	1.57	2.51	4.70	7.51	7.44	8.70
생명보험회사	0.50	0.75	1.55	3.97	6.47	6.27	7.10
손해보험회사	0.72	0.82	0.96	0.73	1.04	1.17	1.60
증권기관	0.11	0.10	1.82	2.18	4.62	3.18	2.60
증권회사	0.00	0.00	1.59	1.99	3.85	2.34	1.70
한국증권금융	0.11	0.10	0.23	0.19	0.77	0.84	1.00
합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각호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각호

금융자산의 축적과 더불어 개인의 금융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변화하면서 개인부문 금융자산의 형태별 구성에 있어서도 상당한 변화가 초래되었다. 먼저 지불결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수익성이 낮은 현금 및 요구불예금 등의 금융자산에 대한 수요는 소득증가에 따라 절대규모는 증가하였으나 개인의 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상대적인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¹³⁾ 소득증가와 더불어 개인 등의 금리민감도가 증가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면서 1970년대 이후 개인부문의 금융자산 구성에서 비은행금융기관의 기타예금과 보험·연금 등의 비중이 크게 상승하였다. 한편 주식, 장단기 채권 등 유가증권에 대한 수요는 금융구조의 고도화에도 불구하고 비중이 낮은 편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이 아직 충분히 발전되지 못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다.¹⁴⁾

<그림 I -2> 개인부문 금융자산의 형태별 구성비



자료 : 한국은행, 「자금순환」, 각호

- 13) 이는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도 경험한 사실로 이들 결제성 금융자산은 소득탄력성이 1보다 작은 필수재의 성격을 갖고 있다.
- 14) 이는 부분적으로 채권의 경우 액면가 및 거래단위가 크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직접금융에서 직접 거래하기는 어려우며 수익증권 등의 간접금융자산 형태로 보유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는 기업의 구조조정과 투신 등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도의 하락으로 인해 안전성이 높은 은행예금에 비해 CP, 회사채 등 위험도가 높은 유가증권에 대한 개인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직접금융시장이 크게 위축되었다.

이러한 급속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질적인 측면에서 아직 충분히 선진화 또는 세계화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일부 제조업은 세계시장에서 선진국과 경쟁할 만큼 기술수준이 발전하였으나 금융산업의 경우에는 이들과 현저한 경쟁력 격차를 보이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은 선진화된 금융기법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못하며, 규모의 영세성과 국제금융시장에서의 경험부족 등으로 국제경쟁력이 뒤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취약한 금융하부구조와 정보수집 및 분석능력의 부족으로 금융기관의 여신심사기능과 전반적인 위험관리능력이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일부 금융관행 및 제도 등으로 인해 국제적 신인도도 낮은 실정이다. 이와 같은 취약성은 결국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이 선진국에 비해 수익성이 낮으며 위기에 취약한 구조를 형성시킨 요인이 되었다.

최근에는 금융자유화 및 개방화의 추진이 가속화되고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의 경영합리화 또는 혁신 노력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과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국내 금융산업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기관간 경쟁도 치열해져 가는 추세이다. 특히 더 이상 정부가 금융기관의 부실에 대해 암묵적인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풍토가 정립되면서 금융기관에 책임경영체제가 확립되고 금융기관 스스로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경쟁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II. 금융구조조정과 금융산업의 현주소

1. 금융구조조정과 공적자금의 투입

가. 외환위기와 금융산업 구조조정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1997년의 외환위기 이후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경험하였다.¹⁵⁾ 이 과정에서 부실채권이 과다하게 누적되었거나 또는 기타 위험 노출이 과다했던 많은 금융기관들이 퇴출되었다. 은행산업은 1997년 이전까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신화를 간직하고 있었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계기로 기존에 26개이던 일반은행이 퇴출, 합병 등으로 2001년 3월에 사실상 12개로 줄어들었다. 1998년 6월 29일 자기자본비율이 8%에 미달하고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희박한 대동, 동남, 동화, 충청, 경기 등 5개 은행이 P&A방식으로 각각 다른 은행에 인수되었다. 그 이후 상업과 한일, 조흥과 강원·충북, 국민과 장기신용, 하나와 보람은행이 합병되었다. 그리고 재무구조가 극히 부실하였던 제일, 서울은행은 해외매각을 추진하였으나, 2001년 3월 현재 제일은행만이 뉴브리지 캐피탈에 매각된 상태이다. 한편 2000년 하반기에 시행된 제 2차 구조조정의 결과, 한빛, 평화, 경남, 광주은행이 우리금융지주회사 산하에, 제주은행이 신한금융지주회사 산하의 자회사로 각각 편입되었다. 한편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은 합병을 통해 국내 최대 규모의 은행으로 부상하였다.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들도 대규모의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1997년말 기준으로 2천여개에 달했던 금융기관 중 약 1/4 정도가 퇴출되었다. 종금사의 경우에는 국내 대기업의 도산에 따른 대규모 손실뿐만 아니라 국제금융시장에서 유

15) 우리나라에서 외환위기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는 최근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금융위기의 발생원인으로는 동남아 금융위기 및 급격한 외화채무 상환요구 등 외생적 압력에 의한 충격론, 환율정책, 금융자유화 및 감독정책 등 무리한 경제정책운영 등에 따른 정책실패론, 그리고 국내경제 내부의 오랜 구조적 문제들로 인해 위기가 발생했다는 구조론, 그밖에 금융자본의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구조개혁을 가속화시키려는 선진국의 음모론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관한 연구로는 김동원(1998), 박대근·이창용(1998), 박원암·최공필(1998), 이영섭·이중화(1998), 조운제(1999), 최창규(1998), 백웅기·정지만(1999), Balino and Ubide(1999), Chang and Velasco(1998), Feldstein(1998), Sachs(1997) 등 참조.

동성 위험과 환위험을 무시한 채 외화를 단기로 차입하여 장기로 운용하거나 위험이 높은 개도국 채권에 투자하다가 대량 부실화되었다. 그 결과 외환위기 이전에 존재하였던 30개의 종금사가 대부분 퇴출되었고 현재는 5개의 종금사만이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¹⁶⁾ 또한 영업기반이 취약하고 신인도가 높지 않았던 상호신용금고도 외환위기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외환위기 이전 231개이던 금고 중 약 40%에 달하는 97개의 금고가 퇴출 혹은 합병으로 소멸되었다. 신용협동조합의 경우에도 외환위기를 계기로 보다 엄격한 감독이 이루어짐에 따라 과거부터 잠재해 있던 부실 규모가 노출되고 조합직원의 횡령, 사기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서 외환위기 이전에 1,666개이던 조합 중 359개의 조합이 퇴출되었다. 보험회사의 경우에도 신설 생보사를 중심으로 편법대출과 과도한 경비지출 등으로 부실이 누적된 13개의 보험사가 퇴출되었다. 다만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숫자가 늘었는데, 이는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7개의 증권사가 퇴출된 반면 대외개방과 증시 활황에 힘입어 외국계 증권사 및 인터넷 중심의 증권사가 신설되고 투신사가 증권사로 전환되는 등 14개 증권사가 신설되었기 때문이다. 2001년 3월말 현재 43개의 증권사가 영업 중에 있다.

<표 II-1>

금융기관 수의 변화

(단위 : 개)

금융권	1997년말	2001년 3월말	감 소			신 설
			면허취소 · 청산	합 병	계	
은 행	33	22	5	6	11	-
종 금	30	5	23	3	26	1
리 스	25	19	8	1	9	3
증 권	36	43	6	1	7	14
보 험	50	40	7	6	13	3
투 신	31	29	9	1	10	8
금 고	231	146	72	25	97	12
신 협	1,666	1,311	258	101	359	4
합 계	2,102	1,615	388	144	532	45

자료 : 금융감독원

외환위기 이후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저하되고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16) 종금사 구조조정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최두열(2001) 참조.

증대됨에 따라 직접금융시장은 더욱 위축되었다. 기업구조조정과 투신, 종금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및 이들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자 은행예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CP, 회사채 등 유가증권에 대한 개인의 수요가 크게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직접금융시장이 크게 위축되었다.

금융구조조정은 외형뿐만 아니라 경영 패러다임에서도 우리나라의 금융을 보다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도록 변모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사실상 1997년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금융자유화 및 개방화는 크게 진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기준으로 평가할 때 상당히 미흡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미진한 부분이 1997년의 경제위기 이후 IMF와 미국 등 선진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대폭 변화하였다. 즉, 국내금융산업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정부의 제도적인 형태의 개입축소와 금융기관의 자율성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었다. 그리고 주식 및 채권 등 자본시장의 완전개방이 이루어지는 한편 환율도 자유변동환율체제로 이행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통화신용정책은 1997년말 한국은행법의 개정과 함께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한국은행의 고유권한으로 귀속되었다.

나. 공적자금의 조성 and 투입

1997년 이후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막대한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였다. 먼저 1998년 1차로 예금보험공사의 43.5조원과 부실채권정리기금의 20.5조원을 합해 총 64조원의 공적자금을 조성하였는데, 이 가운데 약 45조원이 은행에 지원되었다. 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 정리된 금융기관중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2%에 불과하였으나, 금액기준으로는 총 64조원의 70%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64조원의 공적자금중 약 20조원이 회수되었고 이중 14조원은 다시 투입되었다. 이와는 별도로 약 26조원의 자금이 초기의 위기극복과정에서 사용되거나 또는 은행 및 투신사 등에 지원되었다.

<표 II-2>

1차 공적자금의 사용실적

(2000. 6. 현재)

(단위 : 조원)

구 분		예금보험기금					부실채권 정리기금	합계
정부 보증 채권 발행	조 성	43.5					20.5	64.0
	지원실적(A)	증자	출연·예금 대지급	자산 매입	기타	43.5	20.5	64.0
		19.1	21.0	3.2	0.2			
	은 행	15.1	9.6	3.2	0.0	27.9	17.3	45.2
	제 2 금융권	4.0	11.4	0.0	0.2	15.6	3.2	18.8
	회수재원	4.3					15.8	20.1
	재사용실적	3.0	0.3	2.3	0.1	5.7	8.7	14.4

자료 : 재정경제부

그후 1999년 7월 대우사태로 인해 금융기관의 부실이 다시 증가하고 FLC(Forward Looking Criteria) 기준 등 보다 강화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이 적용되면서 추가적인 공적자금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2000년 12월에 40조원(자체조달분 10조원 포함시 총 50조원) 규모의 2차 공적자금을 국회의 동의하에 추가로 조성하였다. 2차 공적자금 중 2001년 3월 현재 약 20조원의 자금이 금융구조조정에 투입되었다. 이중 은행권에는 한빛은행 등 6개 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4.1조원이 출자금으로 지원되는 등 총 14조원이 투입되었다. 그리고 투신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4.8조원의 자금이 출자 형식으로 지원되었으며, 부실 종금사를 통합한 하나로종금의 정상화를 위해 2.5조원이 투입되었다. 2001년 2/4~4/4분기 중에도 6개 은행, 서울보증보험, 부실 생보사, 수협 등 금융기관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약 25조 원 내외의 공적자금이 지원될 계획이다.

<표 II-3>

2차 공적자금의 사용실적

(2001. 3. 현재)

(단위 : 조원)

	출자	출연·예금 대지급	자산매입	기타	계
은 행	4.1	0.2	1.8	0	6.1
보험(보증)	2.7	0.01	0	0	2.7
중 금	2.4	2.1	0	0	4.5
금 고	0	1.3	0	0.4	1.7
투 신	4.8	0	0	0	4.8
신 협	0	0.04	0	0	0.04
지원실적	14.0	3.6	1.8	0.4	19.8

주 : 채권발행으로 채권발행원금상환 등에 사용한 0.6조원 제외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지난 3월까지 1차 및 2차에 걸쳐 총 135조원 가량의 공적자금을 지원하였다.¹⁷⁾ 이러한 막대한 규모의 공적자금은 부실금융기관을 퇴출시키고 금융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할 것이다. 공적자금의 투입은 금융기관들의 기능 정상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성 회복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의 불안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며, 아직도 정상화되지 못한 금융기관이 일부 남아있는 실정이다.

2. 구조조정 이후의 금융산업

과거 국내의 금융산업은 다수의 소형 금융기관들이 유사한 형태의 금융상품 판매를 통해 시중자금을 흡수한 뒤 이를 주요 산업에 공급하는 산업자금 공급 시스템이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의 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 부실금융기관이 퇴출되고 우량금융기관들이 대형금융기관으로 발전하면서 금융산업은 대형금융기관과 소형금융기관들간에 계층적인 형태의 산업구조를 형성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개별금융기관들은 지배구조의 개선, 여신관행 혁신, 사

17) 이는 기금채권 발행자금분 83.8조원, 회수자금의 재투입분 27.2조원, 국유재산,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공공자금 23.7조원을 포함한 것이다.

업부제 도입, 수익성 중시의 조직문화 창출, 위험관리 선진화 등을 통해 보다 발전된 모습의 금융관행을 갖추기 시작했다.

가. 금융산업의 재편

1) 과당경쟁 해소

우선 외환위기 이후의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상당수의 부실금융기관이 퇴출됨으로써 금융기관의 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앞의 <표 II-I>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7년 말 2,102개에 달하던 금융기관의 수가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554개가 퇴출되고 52개가 신설됨으로써 2001년 3월말 기준으로 1,615개로 줄었다. 약 3년의 기간동안 전체 금융기관의 1/4이 퇴출된 것이다. 퇴출 상황을 금융권별로 살펴보면, 은행, 리스사, 보험사, 투신사의 경우 각각 전체의 1/3이, 종금사의 90%, 상호신용금고의 45%, 그리고 신탁의 1/5 가량이 퇴출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지난 30년간 우리 경제가 고도성장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수가 계속 증가하였고 금융산업도 지속적인 신장세를 보였던 모습과 대조를 이룬다. 과거 정부는 금융기관의 신규진입을 과다하게 허용하였고, 그 결과로 국내금융산업은 과당경쟁구조와 저효율체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외환위기 이후의 구조조정 과정은 그간 우리 금융산업에 누적되어 온 구조적 문제점들을 정리하는 계기가 된 셈이다.

2) 대형화 추구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금융기관들이 퇴출된 반면 우량금융기관들은 흡수합병을 통해 오히려 대형화 되었다. 금융권별로 합병 건수를 보면, 은행 4, 종금 3, 리스 9, 증권 1, 보험 1, 상호신용금고 25, 신탁 101 등이다. 이와 같은 변화의 결과로, 지난 3년간 1개 금융기관당 자산규모는 은행, 종금, 증권, 보험, 상호신용금고, 신탁이 각각 88%, 280%, 28%, 69%, 4%, 19%씩 증가하였다.

<표 II-4>

금융권별 평균자산 규모의 변화

(단위 : 억원)

금융권	1997	2000	증감률(%)
은행	161,899	303,858	88
증권	8,425	32,301	280
리스	12,614	9,846	-22
증권	7,605	9,722	28
보험	22,173	37,385	69
금고	1,612	1,669	4
신협	115	137	19

주 : 1) 평균자산=총자산/금융기관의 수

2) 일부 자료는 연말기준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

자료 : 금융감독원, 「은행경영통계」, 「비은행경영통계」, 「금융통계월보」

금융기관의 대형화는 규모의 경제효과를 통해 금융기관의 수익성과 효율성을 높여주고 경쟁력을 제고시킨다. 즉, 대형화는 고객기반 확대에 따른 시장지배력 확충, 유사조직 통합을 통한 비용절감효과 등을 제공한다. 과거에는 유사한 상품을 가지고 수많은 금융기관들이 같은 업종에서 영업을 하였기 때문에 수익성과 효율성이 저하되었다. 그러나 흡수합병을 통해 대형화된 금융기관은 규모 및 범위의 경제효과를 획득하면서 수익성 제고 및 위험 감소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특히 대형금융기관이 업계내에서 구조조정, 가격결정 및 위험관리 등의 부문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나머지 소형금융기관들이 이를 고려하여 행동하는 계층적 형태의 산업구조가 형성되면 금융산업의 효율성이 증진될 것이다.

3) 겸업화 진전

외환위기 이후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겸업화가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었다. 국내에서 겸업화는 원래 자회사 방식으로 시작되었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겸업화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방식의 겸업화가 새로운 방식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다.

우선 최근의 겸업화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동종 또는 이종업종간의 전략적

제휴라는 형태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금융지주회사 방식의 겸업화는 금융구조 조정 과정에서 동종 업종간 흡수합병에 의한 대형화가 어느 정도 진전되자 새로운 형태의 경쟁력 창출을 위한 시스템 도입 차원에서 시작되었다. 아직은 「우리금융지주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와 같이 소수의 금융지주회사만이 출범한 상태이지만, 여타 금융기관들이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시작하면 향후 이와 같은 유형의 겸업화 방식은 금융권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겸업화는 대형화의 수단인 동시에 금융수요자에게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개별 금융업은 제도적인 형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수익과 위험의 관리라는 본질적인 특성에서 동일하며, 정보 능력을 토대로 개발한 금융상품을 고객들에게 전달하는 과정도 대체로 유사하다. 따라서 이종업종이 상호 연계하여 중복기능을 통합하고 동일한 정보와 영업망을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또 다른 형태의 시장지배력 확충, 비용절감효과, 자산부채의 위험분산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지주회사가 중심이 되어 자회사의 위험을 모두 고려하여 수익을 평가하고 금융시장 내에서 현재의 위상과 미래의 성장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개별 자회사의 확대 및 축소 전략을 시행할 경우에는 동태적 형태의 구조조정에 의한 효율성 달성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와 같은 형태의 지주회사 경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히 이종업종을 묶어 놓은 외형적인 형태의 대형화만 달성하고 만다면, 결국 금융그룹의 시너지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겸업화의 이득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시스템마저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금융지주회사제도는 제도의 도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경영이 제 궤도를 찾아가도록 노력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

나. 금융기관의 구조적 변화

구조조정 과정에서 시행된 각종 제도 및 관행의 개선을 통해 금융기관들은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지난 30년간 규모 확대 위주의 경영으로 산업자금의 파이프라인 역할을 해오던 금융기관들이 수익성과 효율성의 개념을 강조하기 시작하는 한편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선진형 시스템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이들은 금융기관의 지배구조 개선을 비롯하여 여신관행 혁신, 사업

부제 도입을 통한 효율성 증대, 수익성 중시의 조직문화 창출, 위험관리 선진화 등을 포함한다.

1) 인력, 점포, 경비의 축소

지난 3년간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내부적으로 대대적인 구조조정과정을 거치면서 상당수의 인력과 점포를 축소하고 경비를 절감하였다. 인력, 점포 및 경비절감의 변화 내용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표 II-5>와 같다. 인력의 경우 신탁만 감소율이 다소 낮을 뿐 대부분의 업종에서 30~50% 정도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점포는 투신사의 증권사 전환이라는 특수 요인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에서 감소하였다. 경비도 증권사의 특수요인과 신탁을 제외하면 8~42%가량 절감되었다. 인력, 점포 및 경비의 절감을 통해 금융기관은 생산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 그러나 감축 후 내부조직과 업무프로세스의 리엔지니어링에 의한 금융기관 내부의 혁신이 수반되지 않으면 시간이 흐르면서 인력, 점포 및 경비는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속성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표 II-5> 금융권별 인력·점포·경비의 변화

(단위 : 명, 개, 억원)

구분	인력			점포수			경비		
	1997	2000	증감률 (%)	1997	2000	증감률 (%)	1997	2000	증감률 (%)
은행	113,994	70,559	-38	5,987	4,709	-21	61,083	52,554	-14
종금	1,569	943	-40	39	24	-38	677	626	-8
리스	1,937	985	-49	74	71	-4	1,472	1,179	-20
증권	36,708	25,271	-31	1,261	1,800	+43	21,145	55,595	+163
보험	83,304	56,726	-32	16,756	9,962	-40	88,080	51,519	-42
금고	10,095	6,173	-39	336	271	-19	5,467	3,846	-30
신탁	30,122	26,313	-13	1,666	1,442	-13	4,135	5,925	+43

자료 : 금융감독원, 「은행경영통계」, 「비은행경영통계」

2) 외국계 지분참여 확대

구조조정 과정에서 다수의 금융기관들은 대외신인도 제고, 자본확충, 선진금융기법 및 노하우 획득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외국계 자본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였다. 그 결과 상당수 금융기관들에서 외국계 자본이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또는 제 1 내지 제 2 대 주주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금융권별로 살펴보면, 우선 은행의 경우에는 제일, 한미, 외환, 하나, 국민은행의 제 1 대주주가 외국계로서 이들 은행의 국내은행 여수신 점유율은 50%를 상회한다. 한편 외국증권사 국내지점과 외국인이 제 1 대주주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증권사의 시장점유율은 1997년 3.9%에서 2000년 10.7%로 증가하였다. 외국계 생명보험사의 시장점유율도 1997년말 1.3%에서 2000년말 9.3%로 계속 상승하였다.

외국자본의 참여는 국내금융기관의 국제화를 촉진시킨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소유구조 변화로 인해 유발되는 문제점 또한 적지 않다. 일반적으로 선진국 대형금융기관들의 소유구조는 다수의 기관투자자들이 지분을 소액으로 분산 보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 경우 특정 대주주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문제점이 배제되는 대신 다수의 기관투자자들이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금융기관의 가치 극대화를 추구하게 된다.

반면 국내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외국계 소수 대주주들의 의사가 경영을 좌지우지하게 되면서 견제와 균형이 깨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대형 우량금융기관에 의해 시장이 주도되는 계층적인 산업구조하에서 외국계 대형금융기관이 시장을 선도하게 되면 통화신용정책의 실효성 약화, 국내산업의 급격한 위축가능성, 금융시장의 안정성 저하 등이 초래될 수 있다. 또한 향후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한 금융기관의 정부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는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3) 지배구조의 선진화

금융기관의 이사회는 주주의 대리인으로서 경영진을 감시·견제하고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이사회는 경영전

략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경영진을 감시·조정하며, 경영 성과를 사후적으로 평가하여 보상수준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경영진은 세부경영전략을 수립·집행하는 한편 이사회의 경영전략 설정 및 평가작업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고 경영성과를 보고한다.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는 금융기관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이사의 과반수 이상을 사외이사로 충원토록 하여 이사회 기능을 강화시켰다. 이에 따라 주주 이익을 대변하고 경영진을 감시하는 선진형 감시기능이 작동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사회의 책임성도 한층 강화되었다. 그러나 아직 이사회는 주어진 기능을 원활히 수행함에 있어서 비대칭적 정보와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이 미비되어 있고,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취약한 가운데 산하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도 취약한 실정이다.

4) 여신관행 혁신

외환위기의 원인 중 하나가 국내금융기관의 취약한 여신심사 기능과 부실한 여신사후관리에 있다는 지적하에 1998년 5월부터 여신관행 혁신을 위해 다양한 과제가 추진되었다. 그동안 선진형 여신심사기법의 도입, 등급별 신용위험 관리기법, RM(Relationship Manager)과 CO(Credit Officer)의 역할 분담, Loan Review제도 도입 등 다양한 종류의 선진형 여신관리시스템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들이 실질적으로 정착되고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인사·조직·보상시스템이 개선되고 여신정보시스템의 하부구조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유형의 여신관행 혁신은 대형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대체로 시스템 도입의 완료단계에 있으나 실질적인 정착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중소형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아직도 도입이 늦어지고 있다.

5) 사업본부제 시행 및 성과주의 문화 정착

금융기관내에서 사업단위별, 팀별 또는 개인별로 성과에 기초한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본부제를 시행하고 성과급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일부 금융기관들은 기존의 기능식 조직을 고객별 또는 시장별 사업본부제로

전환한 뒤 사업본부장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 체제를 구축하고 수익성에 기초한 자원배분과 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향후 성과급제도는 중간관리층으로부터 일반직원에게까지 확대 적용되어야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과정에서 직군별 전문인력 양성이 당면 과제로 부각된다. 성과주의 문화는 인사·조직·보상시스템이 제자리를 찾아갈 때 비로소 조직 구성원간에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므로, 제도 개선 후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6) 위험관리의 선진화

외환위기의 원인이 금융기관들의 수익성 인식 부족과 위험관리 경시에 있었다는 지적으로 지난 3년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 왔다. 금융기관들은 위험관리 조직을 별도의 독립된 부서로 분리하여 영업부서를 견제토록 하는 한편, 신용, 시장, 금리, 유동성 위험을 종합적으로 관리토록 하는 시스템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은행들은 이와 같은 내용들은 이미 상당수 도입하는 과정에 있지만,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일부만이 도입단계에 있으므로 향후 보다 적극적인 시스템 도입 및 정착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3. 금융구조조정의 평가와 문제점

1997년 말 외환위기의 원인에 관한 국내외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외환위기는 국내경제의 실물과 금융부문 및 각종 제도 및 관행이 개방화와 국제화라는 여건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실패한 사례에 해당된다. 다시 말해 외환위기는 지난 30여년 간 지속되어온 고도성장 개발경제체제의 패러다임 붕괴에 해당되는 것이다.

우선 실물부문에서는 그 동안 양적 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과잉투자가 지속되었다. 물론 과잉투자는 수출축진을 통해 해소될 수도 있으나, 국제시장이 과잉공급 상태이거나 국내제품의 국제경쟁력이 저하된 경우에 과잉투자의 문제점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 특히 국내기업들은 과잉투자를 계속하기 위해서 과다차입에 의존하였는데, 간접금융시장 위주로 되어 있는 시장구조하에서 기

업의 레버리지 증대는 곧 금융기관의 여신집중으로 나타나고 이는 다시 금융기관의 신용위험 과다 노출로 이어진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비용 비교우위에 의존한 산업경쟁력이 한계를 들어냄에 따라 실물부문은 부실화에 직면하게 되었다.

개발경제시대에 금융기관은 정부의 암묵적 보증하에 상업성보다는 성장성을 추구하면서 산업자금의 파이프라인 역할을 하였다. 은행과 비은행권의 저축금융기관은 말할 것도 없고 투신사와 보험사도 사실상 준예금수취기관으로서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기업에 공급하는 산업자금의 파이프라인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상황하에서 정부의 암묵적 보증이 제공되었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은 본연의 기능인 선관의무와 기업감시기능에 소홀하게 되었고 상업성을 등한시 하였다. 금융기관은 예금자들에게 원리금을 원활히 돌려주기 위해서 대출고객에 대한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자금에 대한 초과수요가 상존하고 담보관행이 일반화되어 있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seller's market)에서 금융기관은 여신사후관리를 소홀히 할 수 밖에 없었다. 여기에 정부의 암묵적 보증이 제공되기 시작하면 상업성보다도 공공성 중심의 금융행위가 주로 이루어지게 된다.

과거에는 금리와 수수료가 거의 고정되었기 때문에 시장점유율 극대화가 바로 수익극대화로 이어졌고 규모 위주의 경영전략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이와 같은 여건하에서 금융기관들은 유사한 상품을 가지고 과당경쟁을 벌였고 수익성보다도 시장점유율을 중시하였다. 규모 위주의 경영전략은 금융기관 내부의 인사, 조직, 평가, 보상시스템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더욱이 금융기관들은 각종 시장가격이 상당부분 통제되고 대기업의 신용위험이 정부의 암묵적 보증하에 있었기 때문에 위험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다. 결국 금융기관들은 개방화·국제화에 따른 환경변화 속에서 구조적인 취약점을 보완하지 못하며 마침내 외환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국내의 기업 및 금융기관에 대한 각종 제도 및 관행도 국제적 수준과는 거리가 멀었고 개방화과정에서 이를 개선하지도 못하였다. 과거에는 국내 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암묵적 보장이 기업 공시 및 회계제도의 불투명성과 신뢰성 부족을 보상하기에 충분하였으나, 국내 대기업들의 부도가 현실화된 시점에서 이와 같은 믿음은 사라지게 되었다. 또한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의 내

용들도 대부분 과거의 폐쇄되고 규제된 시장에서 형성된 것들로서 개방화되고 자율화된 시장에서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현저히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감독당국은 이를 인식하지 못했거나 또는 적기에 조치를 취하는 데 실패하였다.

이와 같이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의 각종 제도 및 관행의 취약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경제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지 않고는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결국 지난 3년여간의 금융구조조정은 지금까지 논의된 각종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금융구조조정을 사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금융구조조정을 촉발시킨 근본 원인들과 이를 치유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들을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가. 구조조정의 적기시행

금융구조조정의 목표는 붕괴된 금융기관의 부실을 털어내고 더 나아가서 시장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일이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부실은 외환위기 이후 3년이 넘는 시점까지도 완전히 정리되지 않고 있으며, 시장의 하부구조 구축 미비로 시장기능 활성화도 지연되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금융위기가 발생한 국가들의 회복 속도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만큼 빠르지 않다. <표 II-6>에 의하면, 금융위기 발생국가들의 금융위기 지속기간은 평균 5.4년이다. 또한 금융위기 발생 국가의 은행들의 자본적정성, 수익성, 자산건전성의 개선 정도도 위기 이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평가할 때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위기가 발생하고 정부의 구조조정이 시작된 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주요국 은행들의 경영지표들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구조조정 시작 이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11개국을 대상으로 한 은행들의 단순자기자본비율과 ROA는 평균 0.67%p 하락 및 2.6%p 상승을 기록하였다(<표 II-7>과 <표 II-8> 참조). 또한 8개국을 대상으로 한 위기 발생 이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의 부실채권비율은 도리어 평균 6.8%p 만큼 증가했다(<표 II-9> 참조).

이와 같이 금융위기가 단기간 내에 회복되지 않는 것은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금융 또는 실물 자산의 가격에 버블이 발생하여 정부 주

도로 구조조정을 강력히 시행한 소규모 국가들의 경우 구조조정이 조기에 완료된 반면,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하에서 과잉투자와 경쟁력 저하로 위기가 발생한 국가들의 구조조정은 더 긴 시간이 소요되었다. 전자에 해당되는 북구 국가의 경우 회복속도가 매우 빠르나, 여타 유럽국가들의 회복속도는 한국보다 느리다. 외환위기적 성격이 강한 중남미 국가들의 경우 구조조정 기간은 짧으나 위기가 반복되고 있으며, 미국은 소형은행 중심의 부실이어서 장기간에 걸쳐서 정부가 개입하였고 구조조정 기간도 매우 길었다.

<표 II-6>

주요국의 금융위기 기간¹⁾

(단위 : 년)

국 가	CK ²⁾	LGS ³⁾	평균
아르헨티나	3 (1980~82)	3 (1980~82)	3.0
칠 레	3 (1981~83)	7 (1981~87)	5.0
핀 란 드	3 (1991~93)	4 (1991~94)	3.5
말레이시아	4 (1985~88)	4 (1985~88)	4.0
노르 웨이	3 (1987~89)	7 (1987~93)	5.0
스 페 인	9 (1977~85)	9 (1977~85)	9.0
스 웨 덴	1 (1991)	4 (1990~93)	2.5
프 랑 스	-	5 (1991~95)	5.0
이 탈 리 아	-	6 (1990~95)	6.0
미 국	8 (1984~91)	13 (1980~92)	10.5
평 균	4.3	6.2	5.4

주 : 1) ()는 금융위기 지속기간(위기감지 시작부터 은행시스템이 어느 정도 안정화 되기까지)

2) Caprio and Klingbiel 논문

3) Lindgren, Garcia, and Saal 논문

자료 : Frydl, E. J., The Length and Cost of Banking Crises, IMF Working Paper, Mar, 1999.

<표 II-7> 주요국의 은행구조조정관련 자기자본비율 추이¹⁾

(단위 : %)

국 가	T-1	T(A)	T+1	T+2	T+3(B)	개선정도 (B-A%p)
아르헨티나(1980) ²⁾	-	7.38	9.22	8.82	11.33	3.95
칠 레(1983)	6.84	6.16	5.11	4.44	5.69	△0.47
핀 란 드(1991)	5.90	5.43	4.93	4.31	4.34	△1.09
말레이시아(1985)	4.61	6.78	6.12	5.86	4.90	△1.88
노 르 웨 이(1987)	3.25	2.71	3.47	3.15	2.99	0.28
스 페 인(1980)	-	6.03	5.29	4.97	4.62	△1.41
스 웨 덴(1991)	3.93	4.27	3.75	3.98	4.64	0.37
프 랑 스(1991)	3.65	11.87	3.98	3.86	4.20	△7.67
이 탈 리 아(1990)	5.06	4.96	4.66	5.45	5.53	0.57
미 국(1980)	-	4.68	4.70	4.93	5.30	0.62
한 국(1998) (BIS 비율)	5.09 (7.04)	4.84 (8.23)	5.55 (10.83)	5.16 (10.53)	4.18 (11.10)	△0.66 (2.87)

주 : 1) 「The Banker」지에 수록된 세계 1000대 은행의 국가별 자료를 이용.

BIS 자기자본비율은 1992년부터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시작하였으므로 자료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단순자기자본비율을 사용. 단, 한국의 T+3은 2001년 상반기에 해당되고 은행경영통계를 이용

- 2) 국명 뒤의 ()와 T는 은행구조조정이 시작된 연도를 나타내며, 연도는 Dziobek & Pazarbasioglu 참조. 단, 아르헨티나, 말레이시아, 노르웨이,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의 경우는 금융위기 시작 연도에 해당됨.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Tier1)/자산×100

자료 : 「The Banker」, 각 호

Claudia Dziobek and Ceyla Pazarbasioglu, 'Lessons from Systemic Bank Restructuring : A survey of 24 countries', WP161, IMF, 1997

<표 II-8>

주요국의 은행구조조정 관련 ROA 추이¹⁾

(단위 : %)

국 가 ²⁾	T-1	T(A)	T+1	T+2	T+3(B)	개선정도 (B-A%p)
아르헨티나(1980)	-	1.86	1.72	2.37	1.98	0.12
칠 레(1983)	0.40	0.34	0.54	1.71	1.52	1.18
핀 란 드(1991)	0.37	△1.78	△2.11	△1.43	△0.97	0.81
말레이시아(1985)	0.60	△0.66	1.63	0.44	0.33	0.99
노 르 웨 이(1987)	0.56	△0.37	△0.22	0.25	△2.98	△2.61
스 페 인(1980)	-	0.76	0.86	0.80	0.73	△0.03
스 웨 덴(1991)	0.40	△0.42	△1.62	△0.06	0.63	1.05
프 랑 스(1991)	0.46	1.28	0.30	0.23	0.21	△1.07
이 탈 리 아(1990)	1.06	1.04	0.80	0.74	0.83	△0.21
미 국(1980)	-	0.88	0.78	0.79	0.82	△0.06
한 국(1998)	△0.93	△3.25	△1.31	△0.57	0.43	3.68

주 : 1) 「The Banker」지에 수록된 세계 1000대 은행의 국가별 자료를 이용. 단 한국의 T+3은 2001년 상반기에 해당되고 은행경영통계를 이용

2) 국명 뒤의 ()와 T는 은행구조조정이 시작된 연도를 나타내며, 연도는 Dziobek & Pazarbasioglu 참조. 단 아르헨티나, 말레이시아, 노르웨이,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의 경우는 금융위기 시작 연도에 해당됨.

ROA=세전당기순이익/총자산 × 100(%)

자료 : 「The Banker」, 각 호

<표 II-9>

주요국의 금융위기관련 부실채권비율 추이¹⁾

(단위 : %)

국 가 ²⁾	T-1	T(A)	T+1	T+2	T+3(B)	개선정도 (A-B%p)
아르헨티나(1980)	-	10.9	16.9	29.1	30.3	△19.4
콜 롬 비 아(1982)	8.7	14.6	16.2	25.3	25.1	△10.5
우 르 과 이(1981)	8.9	14.6	30.4	24.7	22.3	△7.7
핀 란 드(1991)	-	-	10.0	5.2	6.7	3.3
말레이시아(1985)	-	10.3	20.8	26.8	32.6	△22.3
필 리 핀(1981)	11.5	13.2	13.0	8.9	12.7	0.5
미 국(1980)	-	3.3	3.5	3.3	3.2	0.1
한 국(1998)	6.0	7.4	13.6	8.8	5.6	1.8

주 : 1) World Bank 자료(Sheng 참조, 핀란드는 Caprio 참조)를 인용. 단, 한국은 은행경영통계 이용(T+3은 2001. 6월). 부실채권 비율은 국가마다 기준이 다소 상이하므로 단순 비교하기 어려움.

2) 국명 뒤의 ()와 T는 금융위기가 시작된 연도를 나타냄. 단, 아르헨티나와 미국의 T는 1982년임.

자료 : Caprio and Klingebiel, 'Bank Insolvencies: Cross Country Experience, WP 1620, The World Bank, 1996.

Sheng, A., "Bank Restructuring: Lessons from the 1980s, The World Bank, 1996.

외국의 금융위기 사례를 가지고 판단할 때 우리나라의 금융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이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여론이 국내 금융구조조정의 미진 또는 지연을 논의하고 있는 것은, 구조조정의 완료일을 사전에 설정해 놓고 이를 달성하려는 노력의 소산으로 인식된다. 구조조정의 완료일을 사전에 정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하면 위기를 빠른 시일내에 벗어날 가능성이 있으나, 스스로 완료일이라는 제약조건에 얽매어 신속성을 강조하다가 도리어 부실한 구조조정 결과를 낳을 우려도 없지 않다. 특히 제조업

부문의 과잉투자 또는 부실로 인해 자산매각을 추진해야 하는 경우에는 자산가격의 버블로 인한 구조조정의 경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거시여건이 개선되면서 자산가격이 회복되면 문제가 상당부분 소멸될 수 있으나, 전자는 대규모 설비장치의 매각 또는 청산이라는 작업이 뒤따르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구조조정은 구조조정 기간이 왜 길어지느냐의 문제라기 보다는 필요한 구조조정을 적기에 시행했느냐 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금융구조조정은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됐다. 우선 위기발생 직후인 1998년부터 1999년 상반기까지의 기간을 제 1차 금융구조조정이라 칭한다. 그리고 제 2차 금융구조조정은 2000년 하반기부터 시작되었다. 외환위기 발생 초기에 시행된 정부 주도의 대대적인 구조조정 정책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제 1차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던 1999년 상반기에는 시장기능이 회복되는 듯 하였다. 그러나 대우부실화로 촉발된 불안요인은 시장기능을 또 다시 마비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렇다면 대우부실화는 사전에 예측될 수 없었는가? 대우문제는 1997년 말 외환위기 발생시부터 국제금융시장에서 이미 징후를 보였으며, 그 후 시간이 흐르면서 국내시장도 이를 뚜렷이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던 것이 문제를 확대시킨 주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제 1차 구조조정 이후부터 제 2차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재개된 2000년도 하반기 이전까지 금융구조조정은 정체상태에 있었다. 이 기간 중 현대그룹이 부실화되면서 그 징후가 이미 시장에 표출되었기 때문에 발빠른 금융기관들은 이에 대한 대비를 미리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이 지연되다가 결국 2000년 하반기 이후 일부 대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채무구조조정과 추가 자금 지원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대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현대문제 역시 문제가 노출되기 시작한 1999년 말경부터 조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라면 지원규모를 줄이고 기업의 회생을 앞당길 수 있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구조조정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문제의 근원을 조기에 인식하고 적절한 조치를 적기에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적기조치에 실패할 경우에

는 문제가 악화되면서 구조조정비용이 급증할 뿐만 아니라 시장에 내재된 불안요인으로 인해 시장기능도 쉽게 회복되지 못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금융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조기에 인식하고 미리 조치를 취하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금융기관과 감독당국이 각각 구축하고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나. 기업구조조정 추진

금융기관들이 감수해야 할 위험은 신용위험, 시장위험, 유동성위험, 운영위험 등으로 다양하나, 국내 금융기관의 생사를 좌우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위험은 신용위험이라 할 수 있다. 신용위험 중에서도 대기업에 대한 과다한 신용위험의 노출은 여건이 나빠질 경우 금융기관의 존폐를 좌우하게 된다.

금융위기 이후 차입경영에 의존하던 대기업의 부실문제 해결이 급선무로 등장하였다. 대기업의 부실한 재무구조는 경기침체가 급격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일시에 개선되기 어려웠으므로,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워크아웃이 추진되었다. 워크아웃은 해당기업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금융기관이 제공한 채무재조정에 의해 문제기업의 회생을 서서히 추진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이 성공하기 위해서 금융기관들은 회생가능한 기업과 회생불가능한 기업을 구분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치들이 외환위기 발생 이후의 짧은 기간내에 시행되면서 금융기관은 생존을 위해 회생가능기업의 범위를 확대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회생가능성이 낮은 일부 기업들까지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제공받게 됨으로써 시장규율이 왜곡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저해되는 결과가 일부 초래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은 부실기업의 퇴출을 지연시키면서 구조조정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를 장기간에 걸쳐 희석시키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비용 부담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보조금에 의존한 일부 워크아웃 기업의 영업활동이 결국에는 건전한 기업의 경영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제 2차 구조조정기에 시작된 상시퇴출제도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상당부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기존의 매몰비용을 감안할 때 부실기업문제가 단기간내에 해결되기는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부실기업의 회생은 금융기관의

채무재조정에 의한 재무적 완충장치가 영업확대와 이익창출을 통해 더 이상 축소되지 않아야 가능하므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대상기업의 선별작업과 경기변동의 움직임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 부실금융기관 퇴출

제 1차 구조조정 기간 중에 부실금융기관은 P&A, 청산, 가교금융기관 방식 등에 의해 비교적 과감하게 처리되었다. 당시 P&A 대상 금융기관은 대부분 지역금융기관 내지 소형금융기관으로서 우량금융기관이 이들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정부 지원이 수반되었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큰 문제가 유발되지 않았다. 한편 가교금융기관 방식에 의해 흡수된 금융기관들도 우량 부문을 대형금융기관에 흡수시킴으로써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제 2차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시행된 금융지주회사 방식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처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킬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우선 내부구조조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만약 금융지주회사 산하의 자회사들이 상호 대등한 관계를 유지할 경우,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기관들이 공존함으로써 발생하는 중복기능의 비효율성 해소가 새로운 과제로 대두된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지주회사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기능재편을 통해 조직 전체의 일체성을 확립하는 일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비록 자회사들은 각각이 독립된 조직체라 하더라도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자회사 상호간에 협력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효율적 체제 구축에 장애가 되는 유사한 자회사들의 병존은 금융지주회사의 경쟁력 제고에 반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비은행금융기관의 부실 또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부실화된 중소규모의 비은행금융기관은 이미 설정된 경영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생사 여부를 결정한 뒤 회생가능성이 없으면 과감히 퇴출되어야 한다. 단, 미국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소형 금융기관은 숫자가 많고 사회적 파급효과도 적기 때문에, 대규모 부실이 아닌 경우에는 일시에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보다도 시간을 가지고 부실기관을 하나씩 정리해 가는 방식도 때에 따라서는 더 효율적일 수 있

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라. 직접금융의 정상화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국내 대형금융기관들은 거래기업 부실에 따른 자산부실화로 상당한 피해를 겪게 되었다. 이에 따라 위험이 특정금융기관에 집중되는 간접금융시스템에서 점진적으로 탈피하고 직접금융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금융중개에 수반된 위험을 분산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했다. 그러나 금융구조조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금융불안심리가 팽배함에 따라 직접금융시장은 계속 위축되었고 간접금융시장의 비중이 오히려 증대되는 정반대의 결과가 초래되었다.

직접금융시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 신용평가, 공시제도, 시장감독제도 등의 하부구조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직접금융상품은 간접금융상품과 달리 구매자가 모든 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시장에 불확실성이 팽배하거나 상품에 대한 신뢰도가 취약하면 수요기반이 약화된다. 특히 직접금융상품의 발행 주체인 기업에 관한 신용정보 수집, 분석, 평가가 어려워 가격산정에 대한 신뢰성이 낮거나 이를 도와주는 금융기관들의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으면 투자자들의 수요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즉, 직접금융시장의 하부구조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에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직접금융시장은 발전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과거 국내시장에서 거래되던 직접금융상품 중의 상당수가 보증을 수반하거나 또는 여신성 유가증권에 가까웠기 때문에 시장 발전적 측면에서 볼 때도 국내 직접금융시장의 존립 기반은 원래 취약할 수밖에 없다.

제 2차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위축된 직접금융시장의 시장실패 부문을 보정하고자 회사채 신속인수제도가 도입되면서 시장기능이 일부 작동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는 정부의 시장개입에 의한 잠정적인 시장활성화 조치에 해당되며, 시장 스스로 제 기능을 수행하는 정상적인 시장기능 활성화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진정한 의미에서 시장기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장에 잠재된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직접금융시장의 하부구조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Ⅲ. 금융산업의 미래

1. 금융환경의 변화

가. 금융혁신과 금융자율화

외국의 경우 컴퓨터 기술의 급격한 발달에 힘입어 금융혁신이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금융혁신은 무엇보다도 정보통신 및 전자기술의 발달로 인해 금융거래의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사라지고 정보처리와 거래에 소요되는 금융중개비용이 크게 하락한 데 기인한다. 그 결과 정보의 디지털화 및 금융거래의 전자화가 진행되었고, 다양한 금융업무가 단일 네트워크로 구축되고 있으며, 금융공학의 발달로 금융자산에 대한 위험평가, 금융결제, 신용공여기법 등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별 금융기관은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양질의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고 금융거래의 규모도 비약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확산과 금융공학의 발달로 인해 금융거래는 점포중심에서 고객중심으로 변모하고 있다. 전자결제 및 인터넷뱅킹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점포망을 통한 기존의 금융상품 전달방식이 변화하고 있는 바, 최근에는 점포 없이 인터넷만으로 운영되는 인터넷 전업은행이 등장하고 있다.¹⁸⁾ 고객들도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금리 및 수수료에 대한 민감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

한편 각국 정부는 금융자율화를 통해 금융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금융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과거 금융부문에 대한 지나친 규제가 민간부문의 금융혁신과 규제회피 노력 등으로 실효성이 상실되거나 또는 금융의 효율성 저하라는 문제점을 초래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

18) 인터넷 전업은행으로는 1995년 설립된 SFNB를 시작으로 NetBank, NextCard, Egg Bank 등을 들 수 있다. Egg Bank의 경우 1999년말 현재 예금자수가 70만명을 상회하고 예금수신고가 81.6억 파운드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은행은 초기의 대규모 투자비용과 금리경쟁 등으로 인해 수익성은 아직까지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김병연·이상제(2000) 참조

된다. 이러한 정부의 금융규제완화는 신상품의 개발 및 금융혁신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피드백 효과를 지닌다.

그런데 금융자유화와 금융혁신은 금융수요자의 후생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는 반면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경쟁을 심화시켜 금융산업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즉, 금융혁신은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저축수단을 공급하고 금융서비스를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기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하고 조달비용도 절감해 주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보다 편리하고 저렴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금융기관간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금융중개 마진은 감소될 것이다.

나. 금융기관의 대형화 및 겸업화

금융시장에서의 경쟁격화는 예대마진을 축소시키고 전통적 자금중개업무에서의 수익성을 하락시키게 되었다. 따라서 금융기관도 과거의 자금중개자로서의 기능보다도 정보의 생산 및 관리자로서의 기능이 중시되고 있으며, 금융산업은 금융관련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기능을 담당하는 정보기술 산업으로 그 성격이 변모하고 있다. 그리하여 금융기관들은 각종 거래대상자의 입출금, 자금포지션, 고객신용에 관한 정보수집과 분석결과 자료를 체계화하는 종합정보생산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각국의 금융기관들은 격화되는 경쟁에서 우월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금융업무의 겸업화를 추구하고 있다. 겸업화는 고객에게 보다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범위의 경제 효과를 달성함으로써 금융중개비용을 절감하고 경쟁력 강화를 꾀하려는 취지이다. 특히 컴퓨터 및 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자신의 고유업무 외에 유사 또는 이종 금융업무를 저렴한 비용으로 동시에 취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고객의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관리하는 부계정(wealth account) 관리자의 역할을 중시하고 신금융 분야 진출이나 종합금융업무 취급이 모색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부응하여 각국 정부도 전통적인 업무영역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금융의 겸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최근에는 전세계적으로 금융업종간 업무영역의 구분이 점차 제거되는

추세에 있다.

점업화와 함께, 선도은행을 중심으로 인수·합병 등을 통해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형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대형화는 전산설비투자 및 정보기술 등에 대한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 효과를 얻는 동시에 중복점포의 폐쇄, 잉여인원감축 등을 통한 비용절감 효과, 업무영역의 확대와 대형화에 따른 고객신뢰도의 제고 효과 등을 제공한다. 그리고 대형 선도은행 이외의 다른 금융기관들도 합병·제휴 등을 통해 대형화를 추구하거나 상품별, 지역별, 고객별로 틈새시장(niche market)에서의 특화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다. 국제화와 증권화

금융기술의 발전과 금융규제완화 추세는 국가간의 경계마저 철폐함으로써 금융시장의 통합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금융거래와 관련된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적 발전에 따라 국가간 금융거래의 비용이 대폭 절감되었으며, 각국의 금융규제완화로 인해 금융개방화 및 국제간 금융거래의 자유화가 크게 진척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의 통합과 함께 글로벌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출현이 촉진되고 있으며, 국내금융시장과 국제금융시장간의 연계성이 증가하면서 금융의 범세계화(globalization)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위험감소와 새로운 수익원 개발을 위해 국제적 분산투자의 확대, 조세목적의 차익거래 증가, 외환 및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급격한 증가 등에 따라 국제금융거래 규모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금융시장의 통합에 따라 각국의 금융규제 및 감독체제도 BIS를 중심으로 수렴되고 있으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국제적 기준에 의해 평가받는 시장규율이 정착되고 있다. 이때 국제적 기준과 어긋나는 불투명한 금융관행을 유지하는 경우 신뢰를 상실하고 자금이탈을 경험하게 되므로, 금융시장의 통합에 따라 각국 금융기관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와 관행을 갖추고 국제금융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금융의 범세계화 현상과 함께, 정보비용의 하락과 금융혁신으로 금융의 증권화(securitization) 및 탈금융중개화(disintermediation) 현상이 촉진되고 있다. 금융시장에서는 금융중개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자금의 조달

및 운용수단으로서 증권을 이용하는 직접금융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금융시장에서 신용도가 우수한 대기업은 자금조달에 있어 은행대출보다는 CP, 회사채,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직접금융 의존도를 증가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간접금융을 담당하던 전통적인 상업은행의 기능이 위축되고 있으며,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직접 연결하는 투자은행의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

탈은행화의 진행으로 금융산업의 고객기반도 변화하고 있다. 금융기관은 중소기업 및 가계 등에 대한 고객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전통적인 중개업무에서의 예대마진 하락에 대응하여 투자자문, 협조융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고부가가치 금융서비스 및 수수료수입 비중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증권화 현상에 대응하여 대출채권의 유동화 등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증권화 금융상품의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시장의 환경변화는 결국 금융구조의 변화와 함께 금융기관간 차별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¹⁹⁾ 그리고 변화하는 환경에서의 시장경쟁에서 실패한 부실 금융기관은 퇴출 또는 흡수합병되고, 생존 금융기관 중에서도 소수의 대형 선도금융기관 그룹이 형성되고 여타 금융기관은 부티크(boutique) 형태의 전문금융기관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라. 위험관리 및 금융감독의 강화

금융시장의 자율화 및 개방화는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반면, 금융기관의 수익성 악화 및 도산, 자금의 급속한 이동 등으로 인해 금융시스템과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금융혁신 및 새로운 금융업무 진출에 따른 위험과 금리 및 환율변동에 따른 시장위험의 증가로 금융기관이 직면한 위험 수준이 크게 증대되었다. 따라서 금융산업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위험관리의 강화가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각 금융기관은 자체적으로 시장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영업위험 등 제반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19) 맥킨지 컨설팅은 2010년경에는 외국금융기관이 국내금융시장의 40% 가량을 점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²⁰⁾ 또한 금융당국도 금융부문의 위기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금융환경변화에 상응하는 건전성 규제 및 감독체계의 정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위험중심의 감독체제를(Risk-based Supervision) 구축하고 있다. 각국은 과거 정부의 암묵적 보호에 따른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소하고 부실금융기관의 퇴출 지연에 따른 비용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감독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²¹⁾ 금융산업이 부담하는 위험의 증가에 따라 금융시장의 체제위험(systemic risk) 관리를 위한 금융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이때 원칙적으로 진입 규제, 가격규제, 업무영역규제 등의 경쟁제한적 금융규제는 최대한 완화하는 반면, 거래자 보호 및 안정성 제고 등을 위한 건전성 규제는 강화된다. 한편 정보의 부족 등으로 인해 감독당국이 직접 감독하기 어려운 업무에 대해서는 자율감독형식으로 감독권한을 일부 위임함으로써 금융감독의 적기성 및 효율성을 높이려 하고 있다.

2. 향후 과제 및 개선방향

가. 금융산업과 경제발전의 관계 재정립

과거 개발경제시대에 금융산업은 실물부문의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수단이었다. 이에 따라 금융산업은 자체의 부가가치 창출보다도 실물부문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유발되는 부가가치와 이를 통한 고도경제성장의 실현이 보다 중요한 목표이었다. 그러나 경제시스템과 경제발전의 기본 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금융산업의 위상도 재정립해야 하는 단계에 와 있다.

현재 우리 경제는 과거의 반개방적인 개발체제에서 탈피하여 개방경제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다. 우선 실물부문의 발전을 위해 국내 및 해외시장에서 생산과 투자의 균형 있는 발전이 추구되어야 하며, 금융산업 또한 이와 같은

20) 최근 금융기관들은 과거 개별 위험관리에서 벗어나 신용위험, 시장위험, 유동성위험, 경영위험 등 모든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통합위험관리체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21) 예를 들어 조기경보체제 및 적기시정조치 등 부실 금융기관의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한 시정 명령을 발동함으로써 경쟁력 없는 금융기관을 시장에서 조속히 퇴출시키는 장치를 강화하고 있음.

변화를 수용하는 체제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금융산업은 더 이상 실물부문에 종속될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발전전략을 토대로 성장산업으로 도약함으로써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어야 한다. 국내 금융산업은 소매금융 중심이므로 부가가치 창출 측면에서도 당분간 소매금융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금융구조조정이 완결되는 단계에 들어가면 우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결국 업무영역도 도매금융부문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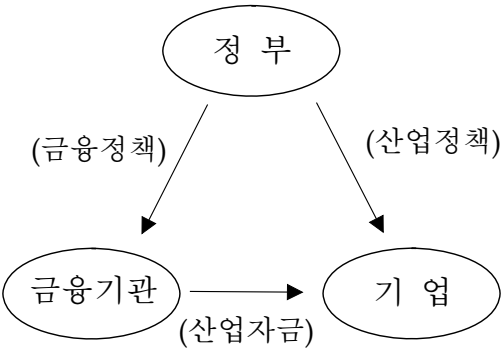
금융지주회사 방식하에서 도매금융을 본격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투자는 행업무와 자산운용업무에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체적인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도 중요하지만 선진경험을 단기간에 받아들일 수 있는 체제 구축도 중요하다. 이에 따라 동 분야에서 상당한 노하우를 갖춘 외국계 금융기관과의 전략적 제휴 또는 지분참여를 통한 동반자적 관계를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투자은행업무의 경우 국내금융기관간 통합을 통해 우선 규모의 대형화를 추구한 후 외국계와의 제휴 또는 국제금융업무에 노하우를 가진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영업범위를 국제무대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자산운용업의 경우 선진금융기관의 전략적 제휴 및 지분참여를 통해 이들의 노하우를 단기간내에 습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나. 정부-금융기관-기업의 관계 재정립

과거 개발경제시대에는 정부가 금융정책과 산업정책에 의거하여 금융기관과 기업을 선도해 나가는 정부주도형 경제체제가 유지되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정부의 산업정책이 제시한 각종 개발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원을 집중 배분하였고, 금융기관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공급하는 수단으로 주로 활용되었다. 이 때 금융기관과 기업은 정부의 암묵적인 보증 하에서 생존에 대한 지속가능성이 보장되었으며, 시스템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정부의 정책으로 해결되었다. 한마디로 경제시스템의 자원배분기능이 시장에 의존하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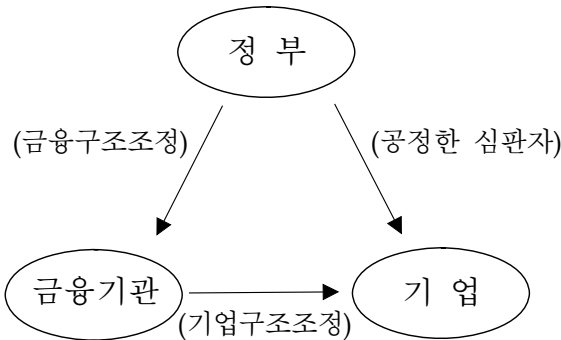
다도 정부의 ‘보이는 손’과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림 Ⅲ-1> 정부주도형 경제시스템



이와 같은 개발경제시대의 경제구조는 외환위기 이후의 구조조정과정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나타났다. 위기를 극복하고 시장이 붕괴된 상황에서 금융부문의 시장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때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형태의 정부개입이 요청되었다. 단, 이전과 다른 점은 정부가 금융정책 대신에 금융구조조정정책을 통해 금융기관을 개선하고, 금융기관은 정부를 대신하여 기업구조조정을 대행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정부는 구조조정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민간부문은 보다 구체적인 기술적인 실무적 판단을 제공하는 형태로 정부의 시장개입이 이루어졌다.

<그림 Ⅲ-2> 구조조정형 경제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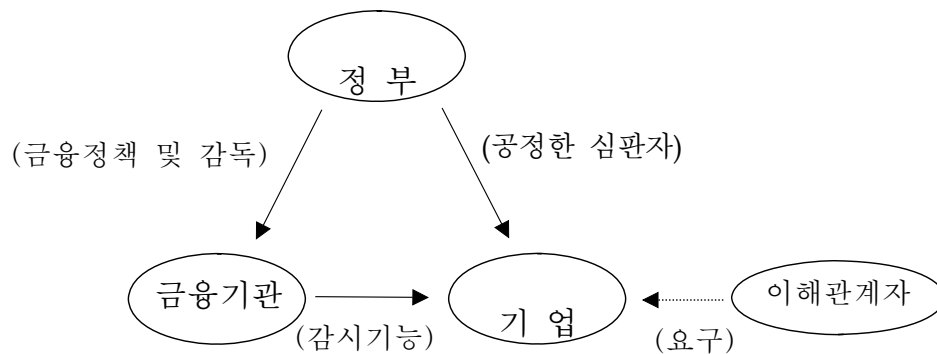


그러나 금융구조조정이 끝나고 경제가 정상적인 단계로 회복되기 시작하면 정부-금융기관-기업의 관계는 그 역할과 위상이 새로이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정부는 금융기관에 대해 금융정책 및 감독기능을 수행하고 기업에 대해서는 공정한 시장질서 준수여부를 판정하고 문제점을 시정하는 심판자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한편 금융기관은 기업에 대한 채권자로서 기업의 여신 상환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구조조정을 독려해야 할 것이다. 즉, 기업구조조정의 주체가 채권자인 금융기관이어야 할 것이며, 정부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 차원에서 금융기관의 기업감시 및 구조조정기능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물론 기업의 구조조정은 기업의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의해서도 추진될 것이나,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위임된 감시기능(delegated monitoring)을 수행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역할이 당분간 더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의 시장중심형 경제시스템하에서는 금융기관과 기업의 관계 재정립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금융기관이 채권자로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 새로운 경제시스템은 작동될 수 없다.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한 감시자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관련 정보수집기능이 정상화되어야 한다. 특히 대기업에 대한 국내외 금융시장 정보 및 각종 공공정보를 원활히 수집하기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국내의 산업구조 및 기업 경영구조를 고려할 때 이는 특정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없으므로 금융기관들이 공동으로 또는 감독기관과의 상호 협조 하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금융기관 스스로도 기업의 문제점을 조기에 파악하고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 향후 직접금융시장의 하부구조 구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국내의 직접금융시장이 기업구조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아직도 많은 기간이 더 소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Ⅲ-3>

시장중심형 경제시스템



다. 금융구조조정의 지속 추진

금융구조조정은 시장에 내재된 잠재적 기업부실이 존재하는 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다수의 국내금융기관이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대기업여신의 부실화 가능성이 조기에 사라져야만 생존을 위한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다. 향후 예상되는 자산부실화에 대비하여 일부 금융기관들은 자본확충을 위한 노력을 당분간 지속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자본확충은 증자 및 수익성 제고 노력과 함께 일부 자산이나 사업부문의 매각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한편 우량금융기관은 향후 예상되는 치열한 경쟁에 대비하여 시장을 선도하고 새로운 금융상품을 제공하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선 동종업종간 M&A를 통해 대형화를 유도하는 한편 금융지주회사 방식 하에서 이종업종간 결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동종업종간 M&A는 결합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감안하여 대등합병보다도 흡수합병 방식이 타당성을 지닌다. 흡수합병 과정에서 주도권을 가진 금융기관이 상대방의 재무적 취약점을 보완하는 한편 자신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상대방의 새로운 기능을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종업종간 결합을 통해 창출될 수 있는 새로운 금융기관의 형태가 바로 금융지주회사 방식이다. 금융지주회사는 이종업종에 속하는 자회사들을 산하에 두고 조직구조상으로는 분업체제를 구축하고 영업구조상으로는 협업체제를 갖

춤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즉, 종합금융서비스체제를 조기에 갖추춤으로써 새로운 고객의 수요를 창출함은 물론 새로운 종합금융서비스 시장을 선점하는 기회도 얻을 수 있다. 단, 금융지주회사 방식은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그룹전체의 신뢰성이 중요하므로 산하 자회사는 모두가 대등한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금융기관은 외부의 시장경쟁에 대비하기 위해 내부에 경쟁체제를 갖추고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등 새로운 소프트웨어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이미 대형금융기관의 경우 지배구조, 인사·조직·보상시스템, 위험관리 등의 측면에서 선진형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들 선진형 시스템이 국내금융기관 조직에서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내부경쟁원칙의 확립, 성과급 제도의 확산, 정보시스템의 구축 등은 물론 조직 구성원 하나 하나가 성과주의 정신을 정착시키고 토론에 의한 합리적인 결론 도출 등이 가능한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즉, 선진형 시스템을 단순히 도입한다고 하여 금융기관의 경쟁력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부구조를 구축하는 후속작업이 더 어려우며 시간도 많이 소요된다.

라. 직접금융시장 기능의 활성화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금융중개기능이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에 내재된 불확실성의 제거, 금융상품의 위험에 적합한 가격 책정, 시장하부구조 구축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직접금융상품의 경우 구매자는 상품에 내재된 신용위험과 가격위험을 직접 책임져야 하므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거나 금융상품에 내재된 위험이 클 경우 수요가 확대되기 힘들다. 금융상품에 내재된 불확실성의 근원은 금융상품을 발행·제공하는 기업의 잠재적 부실가능성에 있으므로 기업구조조정의 조기 마무리는 직접금융시장 회복의 전제조건이 된다. 따라서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조속한 사후관리 조치를 통해 회생가능성이 낮은 기업의 즉각적인 퇴출과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회생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시장에 내재된 불확실성을 제거시켜야 한다.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이 크더라도 위험을 정확히 인식하여 가격에 반영시키

는 선별기능이 존재하면 직접금융시장은 크게 위축되지 않을 수 있다. 즉 고수익·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신뢰성있는 위험 및 가격평가기능만 갖추어지면 부실기업 잔존에 따른 시장불확실성도 극복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선 기업의 신용정보를 적기에 정확히 수집하여 유통시킬 수 있는 기능이 중요하다. 기업회계정보의 투명성 제고는 말할 것도 없고 해당기업에 대한 각종 비계량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토대로 미래의 기업이익과 현금흐름을 예측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해 산정된 기업에 대한 평가는 사후적인 검증을 통해 사전적 평가에 대한 신뢰성 여부를 공시함으로써 부실신용평가기관이 시장기능에 의해 퇴출되어야 한다.

기업신용평가의 신뢰성이 회복되더라도 기업이 발행하는 개별 금융상품의 가격을 정확히 평가하여 시장에 유통시키는 기능이 취약하면 안된다. 이와 같은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의 가격을 적정하게 책정할 수 있는 다수의 신뢰성이 있는 금융기관들이 존재하여야 한다. 다수의 금융기관이 경쟁 시장에서 가격을 책정하고 책정된 가격이 사후적으로 시장에서 검증되는 과정을 통해 신뢰성이 낮은 금융기관이 퇴출되는 시장경쟁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향후 기업신용정보의 수집, 분석 및 금융상품의 가격결정을 위한 제반 하부구조가 시장에서 구축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므로 단기적으로는 기업구조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일정 등급이상의 기업에 대한 직접금융상품의 발행과 유통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와 같은 범위를 넘어서서 직접금융시장의 폭과 깊이가 확대되려면 직접금융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관련 하부구조의 구축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 금융기관의 효율화 및 수익기반 확충

향후 개별 금융기관들은 기존의 개발경제체제 하에서 형성된 저수익, 저효율 구조에서 탈피하고 체계적인 위험관리를 철저히 수행하면서 고수익, 고효율 구조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개별 금융기관들의 소프트웨어 개선 및 수익 극대화를 위한 각종 경영전략이 중시될 뿐만 아니라 진입과 퇴출을 보다 유연하게 하여 시장경쟁을 촉진시키는 일 또한 중요하다.

우선 개별금융기관들은 내부 경영혁신을 통해 고수익, 고효율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수익성 극대화를 지향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각종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한 지배구조 및 조직구조의 선진화가 필요하다. 금융기관들이 전체적인 차원에서 수익성 극대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본부별, 팀별, 개인별로 수익성 극대화 목표를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조직 전체의 경쟁력이 개별 부서 및 개개인의 경쟁력으로부터 창출되기 때문이다. 즉, 조직내부에 경쟁체제가 구축되지 않으면 기관 전체적으로도 경쟁력이 창출되지 않고 결국 시장경쟁에서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수익은 항상 위험을 동반하기 때문에 위험관리가 선행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수익성 추구는 자칫 부실화를 유발하여 금융기관의 건전성 저하를 초래한다.

금융시장의 경쟁체제 구축은 또 다른 측면에서 금융효율성 및 경쟁력 제고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에 해당된다. 경쟁체제는 자유로운 진입 및 퇴출과 함께 경쟁그룹(peer group) 내에서 다수의 경쟁기관들이 존재해야만 가능하다. 만약 소수의 기관만이 존재하는 시장에서 진입과 퇴출이 발생하면 경제력 집중 현상이 심화되므로 진입과 퇴출 자체가 자유로울 수 없고 “대마불사”의 가능성만 커진다. 반면 수많은 금융기관들로 구성된 산업에서는 수시로 진입과 퇴출이 발생함으로써 경쟁체제가 구축되고 이를 통해 개별금융기관의 경쟁력 증진이 가능해 진다. 따라서 향후 금융기관들의 대형화에 따른 금융기관의 숫적인 감소와 이에 따른 경쟁구조의 취약성은 금융기관의 신규진입을 촉진함으로써 일정한 수준의 시장경쟁체제가 계속 유지되도록 보완되어야 한다.

3. 미래 금융의 모습

가. 금융산업의 미래 모습

미래의 금융산업은 대형화·점업화·전문화가 공존하는 가운데 상품유통체계가 다양화하고 글로벌화와 지역금융, 일반금융과 맞춤금융이 병존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우선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세계의 금융시장들이 동질적인 특성을 갖거나 또는 통합이 되면서 시장의 크기가 확대될 것이므로 금융중개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도 대형화될 수밖에 없다. 금융기관의 대형화는 동종 및 이종업종에서 동시에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전세계적인 규제완화 추세를 감안할 때 이종업종간 결합을 통한 대형화가 더욱 확대될 것이다.

대형화된 금융기관의 내부조직은 금융기술의 고도화에 힘입어 더욱 전문성을 추구하는 한편 이종업종과의 연계를 통해 복합금융상품을 더욱 확대하여 제공할 것이다. 이종업종간 복합금융상품은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한꺼번에 충족시킬 수 있는 종합금융서비스(one-stop financial services)의 제공을 가능하게 하여 새로운 금융시장을 창출할 것이다.

한편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전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초우량금융그룹이 국제적 금융센터를 선도하는 가운데 지역별로는 국별 수준에서 대형종합금융그룹이 국내시장을 선도할 것이다. 국제적인 초우량그룹과 국내대형그룹간의 관계는 국별시장이 어느 정도 글로벌시장과 동질성을 갖고 유사 또는 종속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대형금융기관의 고객은 규모가 큰 시장에서 활동하는 대기업과 고수익가계가 될 가능성이 큰 반면 소형금융기관은 지역금융시장에서 일반고객을 대상으로 지역밀착경영을 추구하거나 틈새시장을 공략하게 될 것이다.

금융공학에 기반을 둔 각종 신상품과 맞춤상품이 일반화하면서 금융시장은 일반금융서비스시장과 맞춤금융서비스시장으로 이원화될 가능성이 크다. 일반금융서비스는 표준화된 상품이기는 하나 기존의 상품과는 달리 복합금융상품으로서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구성상품의 비율을 선택할 수 있는 보다 차별화된 서비스일 것이다. 반면 맞춤금융서비스는 고객의 개별적인 금융수요의 특수성을 감안한 복합금융상품으로서 전자금융과 파생금융시장이 확대되면 이와 같은 유형의 상품이 보다 보편화 될 수 있을 것이다.

금융상품의 공급채널도 점포망중심의 on-site 채널과 전자금융에 의존한 off-site 채널이 병존할 것이나 후자가 보다 널리 확대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전자결제가 가능한 상품의 경우에는 대부분 off-site 채널에 의존할 것이나, 전자결제가 여의치 못한 상품의 경우에는 기존의 on-site 채널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향후 off-site 채널이 확산되면 실물거래시 수급자간에 금융거래를 직접

수행하는 탈금융중개화(disintermediation)와 맞춤금융이 일반화되는 대량맞춤화(mass customization) 현상이 널리 나타날 것이다.

나. 금융기관의 미래 모습

미래의 금융기관은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off-site 서비스 채널의 비중을 확대하며, 맞춤상품이 일반화되는 영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조직을 재편하고 인력을 재구성하게 될 것이다.

금융기관이 종합금융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종업종간의 협력 및 결합이 전제 되어야 하므로, 지주회사방식이든 아니면 내부겸영체제이든 간에 이종업종간 협업이 가능한 조직구조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특히 off-site 서비스 채널 비중이 확대되면 소수의 고급인력이 경쟁력 있는 상품을 기획·설계하여 전자매체를 통해 상품의 공급을 확대시킬 수 있다. 특히 개발된 상품의 경쟁력은 전자매체에 의해 형성된 시장에서 타 유사상품과의 비교를 통해 기존시장에서 보다는 우열이 쉽게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상품의 기획 및 설계능력이 취약한 금융기관은 시장에서 빠른 속도로 도태될 가능성이 크다.

미래의 금융기관은 은행·증권·보험·자산운용 업무를 종합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인력을 보유하고 고객의 개별적인 요구에 따라 다양한 금융상품을 결합한 신상품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조직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일단 이종업종을 모두 망라하는 상품기획이 가능하면 구체적인 조달·설계·운용은 각 부문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업무구조 하에서는 고객의 요구에 응하여 상품을 기획하는 마케팅 담당자의 기획·조정능력이 중요해진다. 향후 금융기관이 이와 같은 형태로 업무를 영위하게되면 취급자산 및 서비스의 제공 규모는 매우 커지나 내부조직은 소수의 고급인력으로 구성되는 슬림형의 조직형태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향후 도매금융부문에서 우선적으로 나타날 것이나, 전자금융이 확산되면 소매금융부문도 유사한 패턴을 따라 갈 가능성이 크다.

참고문헌

- 고성수, 『금융기관 부실자산 정리방안』, 한국금융연구원, 2000. 8.
- 권재중 『금융기관 인허가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 1999. 12.
- 금융산업발전심의회, 『금융제도개편연구』, 1993, 12.
- 김동원, 「경제위기의 원인과 금융구조 분석」, 『경제학연구』 제46집 제4호, 1998.
- 김동환, 『은행과 기업의 관계와 금융시스템의 향방』, 한국금융연구원, 1999. 5.
- 김병덕, 손상호, 이지언, 정재욱, 『금융기관 퇴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2000. 12.
- 김병연, 「전자금융거래 확대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전자금융의 현황과 과제』, 한국금융학회 발표자료, 2000. 4.
- 김병연, 이상제, 『전자금융거래 확대에 따른 법·제도 정비방안』, 한국금융연구원, 2000. 6.
- 김우진, 남일충, 『소프트웨어 중심의 금융·기업 구조개혁』, 한국금융연구원, 1999. 2.
- 김정환, 차백인,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 확대에 따른 규제 재정비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2000. 12.
- 박대근, 이창용, 「한국의 외환위기: 전개과정과 교훈」, 『경제학연구』 제46집 제4호, 1998.
- 박영철, 김병주, 박재윤, 『금융산업 발전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1986. 5.
- 박원암, 최공필, 「한국 외환위기의 원인과 예측가능성」, 『한국경제의 분석』 제4권 제2호, 1998년 12월,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 백웅기, 정지만, 「은행위기의 원인과 예측가능성: 한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의 분석』 제5권 제2호, 1999년 12월,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 손상호,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 제도 개편방안』, 한국금융연구원, 1999. 7.
- 손상호, 『금융산업 소프트웨어 개선의 과제와 전망』, 한국금융연구원, 2001. 4.
- 안종길, 「은행위기의 발생원인과 향후과제」, 『한국경제연구』, 한국경제연구학

- 회, 1999. 12.
- 이건호, 『VaR의 이해와 국내금융기관의 VaR 시스템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 1999. 1.
- 이영섭, 이종욱, 「한국의 외환위기: 예측 가능했는가?」, 국제금융연구회 발표논문, 1998.
- 이종욱, 「효율적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 개선방안」 한국금융학회 발표논문, 2000. 11.
- 정건용, 『우리나라 금융정책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997. 7.
- 정지만, 「은행산업의 생산성 제고와 금리안정화」, 『금리하향안정화 방안』, 한국경제연구원, 1997. 5.
- 정지만, 「금융환경의 변화와 우리나라 은행의 수익성」, 『은행의 수익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방안』 2000.11, 한국금융연구원.
- 조운제, 『한국의 금융자유화와 금융위기』, 조사연구자료 99-3, 1999, 한국은행.
- 지동현, 『신용경색과 은행대출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 1998. 4.
- 최두열, 『종금사에 대한 규제감독과 외환위기 발생』, 2001.3, 한국경제연구원.
- 최창규, 「투가적 공격이론과 한국의 외환위기」, 『경제분석』 제4권 제2호, 1998, 한국은행.
-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경제 반세기 : 역사적 평가와 21세기 비전』, 1995. 12.
- 한국금융연구원, 『개방시대의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1997. 6.
- 한국금융연구원, 『한국 금융시스템 재구축 방안』, 1999. 12.
-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지주회사제도 개선방향』, 2000. 7.
- 한국은행, 『한국은행 50년사』, 2000.
- Balino, T.J.T. and A. Ubide, "The Korean Financial Crisis of 1997-A Strategy of Financial Sector Reform", *IMF Working Paper* WP99/28, March 1999, IMF.
- Berger, A.N., "The Relationship between Capital and Earnings in Banking",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Vol. 27. No. 2, 432-56. 1995.
- Boehne, Edward. G., "Financial Modernization : Vastly Different or Fundamentally the Same?", *Business Review*, Jul/Aug, 2000, FRB of Philadelphia.
- Caprio, G. and D. Klingebiel, "Bank Insolvencies: Cross Country Experience",

- WP 1620, 1996, The World Bank.
- Caprio, G. Jr. and L. Summers, "Finance and its Reform: Beyond Laissez-Faire",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1171, The World Bank.
- Chang, R. and A. Velasco, "The Asian Liquidity Crisis", *Working Paper* 98-11, July 1998b, Federal Reserve Bank of Atlanta.
- Demirgüç-Kunt, A. and E. Detragiache, "The Determinants of Banking Crises in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IMF Staff Papers* Vol. 45. No. 1, 81-109, March 1998a, IMF.
- Demirgüç-Kunt, A. and E. Detragiache, "Financial Liberalization and Financial Fragility", *IMF Working Paper* WP98/83, June 1998b, IMF.
- Dziobek, Claudia and Ceyla Pazarbasioglu, "Lessons from Systemic Bank Restructuring : A survey of 24 countries", *IMF Working Paper* WP 161, 1997, IMF.
- Feldstein, M., "Trying to do too much", *Financial Times*, March 5, 1998.
- Frydl, E. J., "The Length and Cost of Banking Crises", *IMF Working Paper*, March 1999, IMF.
- Hutchison, M. and K. McDill, "Are All Banking Crises Alike? The Japanese Experience in International Comparison", *Working Paper* No. PB99-02, Economic Research Department, April 1999, Federal Reserve Bank of San Francisco.
- Kaminsky, G.L. and C.M. Reinhart, "The Twin Crises: The Causes of Banking and Balance-of-Payment Problems", *International Finance Discussion Papers* No. 544, March 1996,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 Roubini, N. and X. Sala-i-Martin, "A Growth Model of Inflation, Tax Evasion and Financial Repression",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Vol. 35, No. 1, 275-301, 1995.
- Sachs, J., "Global Capitalism," *The Economist*, September 12, 1998.
- Sheng, A., *Bank Restructuring: Lessons from the 1980s*, 1996, The World Bank.